
2016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①

교육부 1주기 대학정원감축정책 평가와 진단

2016. 9.

국회의원 유 은 혜

더불어민주당/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차 례

I. 들어가며	1
II. 1주기 대학구조조정 평가계획안 및 교육부 실적	5
1.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 / 7	
2.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따른 입학정원 감축실적 / 8	
III. 대학구조개혁(정원) 정책의 문제점	11
1. 지방대학 죽이기 - 4년제대학 대학정원감축 결과를 중심으로 / 13	
2. 지방대학 죽이기 - 전문대 대학정원감축 결과를 중심으로 / 16	
3. 정원 외 모집 분석(1) - 대학 정원감축의 탈출구 / 19	
4. 정원 외 모집 분석(2) - 기회균형선발, 재외국인(외국인)전형 / 28	
IV.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문제점	35
1.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 문제 / 37	
2. 대학구조개혁 현장사례 - 응지세무대학을 중심으로 / 42	
V. 별첨자료	45
1. 교육부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발표] 보도자료 / 47	
2.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서 / 53	
3. 2013년 정원대비 2016년 전국 4년제 대학 입학정원 현황 / 69	
4. 2013년 정원대비 2016년 전국 전문대학 입학정원 현황 / 75	

Part

I

들어가며

I. 들어가며

오늘날 우리나라 대학이 직면한 가장 큰 환경적 요인은 저 출산에 따른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경향이다. 이에 따라 교육계의 최대현안은 학생인구 수 감소에 따른 정책의 변화이고, 대학이 앞으로 얼마나 더 폐지되고, 정원조정이 되어야 하는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교육부가 2014년 초에 발표한 계획에 따라 대학정원감축은 이미 현실이 되었다. 1주기 4만명 감축의 목표는 1주기 2017년 종료 이전에 이미 완료되었고, 교육부는 2주기 평가를 1년 앞당기는 안에 대해서도 협의가 진행 중이다. 대학구조개혁은 학령 인구수 감소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고등교육 육성의 측면에서 어떠한 비전을 바탕으로 정원감축과 학과(전공) 통폐합이 이루어지는 지 이다.

획일적인 기준 아래에서의 평가는 지방소재 대학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 1주기 대학평가가 시작될 때부터 한결같이 우려되었던 부분이 바로 ‘지방대 죽이기’로 전락할 것이며, 지역균형 발전의 관점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었다. 1주기 평가가 종료되기 직전 해인, 2016년에 2013년 대비 2016년의 대학정원감축 현황을 분석하며, 가장 주안점을 두고 분석했던 것도 바로 수도권과 지방의 감축 분포현황이었다.

이 외에도 △수도권-지방 간 불균형 △대학별 양적 팽창에 따른 열악한 교육여건 △대학 구성원이 아닌 사학운영자 중심의 문제 해결 등 우리 대학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고스란히 담긴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안에 대한 우려도 깊었다.

대학이 자구책으로서 정원이 감축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원외모집’ 정원이 활용되고 있는 현황도 확인하였다. 주로 서울 소재 대형대학들은 입학을 원하는 고등학생들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원외모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고, 이번 분석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대학원도 유사한 현상이 있을 것이라 예측된다.

이제는 대학 정원 감축을 위한 기존의 구조개혁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더 이상 퇴출 중심의 대학 구조개혁으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변화를 대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도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6년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된 2013~2016년 전국 대학의 입학정원 현황, 정원외모집 정원의 변동 추이, 정원외모집의 세부전형별 입학생수 변동 추이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교육부 정원감축1주기의 중간평가와 진단을 시도한다.

Part

II

1주기 대학구조조정 평가계획안 및 교육부 실적

Ⅱ. 1주기 대학구조조정 평가계획안 및 교육부 실적

1.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2014년으로, 교육부는 2014년 1월 28일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의 핵심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로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은 정원감축을 실시하는 것이다. 2014년부터 22년을 3주기로 나누어 대학을 평가하고 최우수 등급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대해 차등적으로 정원감축을 하고 정부재정지원사업 평가에 구조개혁계획을 반영하여 자율적 정원감축도 병행함으로써 2023학년도까지 16만명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1> 주기별 정원감축 목표(안)

평가주기	1주기('14~'16)	2주기('17~'19)	3주기('20~'22)
감축 목표량	4만명	5만명	7만명
감축 시기	'15~'17학년도	'18~'20학년도	'21~'23학년도

두 번째는 새로운 대학평가체제 도입이다. 대학 특성화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기존 정량지표 위주의 대학 평가에서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맞춤형 대학평가체제(절대평가)로 전면 개편하는 것이다. 평가지표를 공통지표와 특성화 지표로 구성하고 각 대학 특성에 따라 평가 지표를 별도로 설정하며 결과를 5개 등급으로 나누어 등급별로 구조개혁 조치를 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속적 구조개혁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대학 구조개혁을 위해 교육부는 구조개혁 정책을 총괄하고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구조개혁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비상설 평가단을 추가로 운영하여 평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무조직 운영을 준비하는 것이다. 또한 대학 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구조개혁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하고 사립대학에 대한 원활한 구조개혁을 위해 자발적 퇴출 경로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2.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따른 입학정원 감축실적

교육부가 예상하는 1주기 대학정원감축의 결과는 2013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2018학년도 입학정원(계획)을 비교해보았을 때 총 53,540명이 감축될 예정이다. (2013년도 대비 2016년 입학정원을 비교해보면 현재까지 40763명이 감소한 상태이다) 이 중 감축실적으로 미인정되는 9,439명을 제외하더라도 대학구조개혁 1주기의 정원감축 실적은 총 44,101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 주기별 정원감축 목표안에 계획되어 있던 1주기 감축목표 4만 명을 상회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2> 대학구조개혁 1주기 감축 실적

(단위 : 명)

총 입학정원	'13학년도(A)	'16학년도	'18학년도(B, 계획)
일반대	342,291	320,424	314,203
전문대	196,567	177,661	171,115
합계	538,858	498,085	485,318
총 감축량(A-B)		53,540	
감축실적 및 계획		44,101	
실적 미인정분		9,439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따른 입학정원 감축 실적

□ 등급별 정원감축 권고 및 이행

○ 등급별 정원감축 비율

등급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E 등급	평가제외
감축 비율	일반	자율감축	4%	7%	10%	15%	7%
	전문		3%	5%	7%	10%	5%

○ (정원감축 이행) '13학년도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대학별로 통보된 정원감축 권고 비율에 따라 대학별 정원감축 계획 수립

- '14학년도 이후 대학이 자율적으로 감축한 실적은 평가에 따른 정원 감축 시 인정되며, 부족분은 '17~'18학년도에 걸쳐 이행

※ 대학 내 정원 조정을 위한 학내 의견 수렴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고, 정원 감축 실행 현상 및 일시적인 대입경쟁률 상승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2개 학년도에 분산하여 정원감축 계획 수립

□ 1주기 정원감축 실적 및 계획 검토

○ (정원감축 실적 인정 기준) '13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18학년도 입학정원(계획) 변동량을 주간·야간으로 각각 나누어 도출하여 합산 후, 감축실적으로 미인정되는 경우(☞붙임 참조)는 모두 제외

○ (1주기 정원감축 실적) '13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18학년도 입학정원(계획)은 총 53,540명 감축되었으며 이 중 감축실적으로 미인정되는 9,439명을 제외한 대학구조개혁 1주기의 정원감축 실적은 총 44,101명

⇒ 1주기 감축목표 4만 명 상회('16.9. 기준)

< 1주기 감축 실적 >

(단위 : 명)

총 입학정원	'13학년도(A)	'16학년도	'18학년도(B, 계획)
일반대	342,291	320,424	314,203
전문대	196,567	177,661	171,115
합계	538,858	498,085	485,318
총 감축량(A-B)	53,540		
감축실적 및 계획	44,101		
실적 미인정분	9,439		

1. 보건의료 정원 배정 등을 위한 정원감축 미인정
2. 정원감축 제재 처분 및 법정 의무에 따른 정원감축* 미인정
 - * 전문대 학과개편(2년제→3·4년제)에 따라 편제정원은 일정하게 유지하며 입학정원을 감축한 경우도 미인정
3. 학부 정원 감축에 대한 대학원 정원 증원의 경우, 정원감축 미인정
4. 의·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의·치과대학으로 학제를 전환하는 경우, 관련 정원 변동분(순증 및 타 학사과정 감축)은 모두 미반영
5. 입학정원을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하여, 야간 입학정원 감축분에 대하여는 50%만 실적 인정(소수점 이하 절사)
 - * 단, 야간감축분 50% 인정은 '15학년도 입학정원부터 적용('14학년도 입학정원 감축 시 야간 정원 감축 실적은 100% 인정)
6. 해양대학의 경우, 타 단과대학에서 해사대학 정원으로 자체 조정된 실적은 정원감축 실적으로 인정
7. '14학년도 이후 대학의 자율감축 실적이 반영되며, 재정지원 사업(CK, ACE, SCK 등), 정부재정지원제한 평가와 연계한 정원 감축 실적은 자율 감축 실적으로 인정되나, 상기 세부 적용 기준에 따름
 - * (참고) 전문대의 경우 SCK사업에서 야간정원 감축분에 대해 100% 실적으로 인정하였으나,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른 자율감축 실적 인정의 경우 전문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에 따라 50%만 인정
8. (추가) 야간 입학정원을 주간 입학정원으로 전환한 후, 주간 입학정원에서 감축하는 경우, 야간 입학정원 감축으로 간주하여 50%만 실적 인정
 - * '17년 입학정원 감축(계획)부터 적용

Part

III

대학구조개혁(정원) 정책의 문제점

Ⅲ. 대학구조개혁(정원) 정책의 문제점

1. 지방대학 죽이기 - 4년제대학 대학정원감축 결과를 중심으로

대학정원감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2013년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2016년 전국 192개 4년제 일반대학의 입학정원은 21,867명이 감축되었다. 2013년 입학정원은 342,291명이었으나 2016년에는 320,424명으로 줄어든 것이다. 전국적으로는 2013년 입학정원 대비 2016년 평균 6.4%의 입학정원 감축이 있었고 각 대학별로 평균 114명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4년제 대학 192개 중 2013년 대비 2016년 입학정원이 줄어든 대학은 총 141개로 전체 대학 비율의 73.4%로 나타나 10개 대학 중 7개 대학이 정원을 감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3년 대비 2016년 감축된 인원 21,867명 중 지방대(수도권 이외) 121개 대학에서 16,914명이 감축되어 총 감축인원의 77.4%가 지방소재 대학에서 줄어들었다. 전국 4년제 일반 대학의 37%, 전국 입학정원의 36%를 수도권 소재대학이 점유하고 있지만 실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 71개 대학의 감축 인원은 4,953명으로 전체 감축인원의 22.6%에 머물렀다. 특히 서울은 1,645명으로 총 감축인원의 7%에 그쳤다.

또한 인원이 감축된 대학 중 100명 이상 감축된 대학은 87개 대학이었으나 15개 대학(17%)만이 수도권(서울 8개, 인천 1개, 경기 6개) 대학이었고 나머지 72개 대학(83%)은 수도권 이외 지방소재 대학으로 나타남으로써 100명 이상의 대량 정원감축의 책임도 지방대에 쏠렸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정원 변동이 없는 대학은 총 45개(23.4%)였으며 이중 27개교가 수도권(서울 16개, 경기 11개) 대학으로 수도권 소재 대학들이 정원변동이 없는 대학의 60%를 차지했다. 또한 입학정원이 늘어난 6개 대학 중에선 4개교가 서울소재 대형대학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였다.

<표3> 2013년 대비 입학정원이 늘어난 전국 6개 대학

학교명	설립유형	지역	입학정원				입학정원 감축량(A-B)
			2013(A)	2014	2015	2016(B)	
예원예술대학교	사립	전북	249	249	324	324	-75
이화여자대학교	사립	서울	2,989	2,989	3,027	3,027	-38
광신대학교	사립	광주	130	142	142	142	-12
연세대학교	사립	서울	3,408	3,408	3,417	3,417	-9
고려대학교	사립	서울	3,793	3,793	3,799	3,799	-6
서울대학교	국립대법인	서울	3,124	3,124	3,130	3,130	-6

2013년 대비 2016년 입학정원 감축 비율은 전국 평균 6.4%(각 대학별 평균 114명)이었다. 하지만 전국을 16개 지역별로 나눠 분석한 결과, 지방소재 4년제 대학교의 정원감축은 수도권, 특히 서울에 비해 심각하게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16개 지역 중 평균보다 높은 비율의 정원감축이 이뤄진 곳은 총 10개 지역이었으며 그 중 가장 많은 비율이 감축된 전북은 감축비율이 11.1%로 10개 대학에서 2,034명의 인원이 줄어들었다. 전북 다음으로는 광주(9.2%), 경북(8.8%), 전남(8.7%) 순이었으며 지방권의 평균 감축비율은 7.7%, 평균 140명이 감축되었다.

반면에 서울은 평균 2.1%, 인천은 4.1% 감축에 그쳤다. 특히 서울은 39개 대학 중 정원을 1명 이상 단축한 대학이 19개에 불과했으며 평균 42명 감축에 머물렀다. 수도권으로 넓혔을 경우에도 평균 4.6%(평균 78명) 감축에 머물러, 지방소재 대학이 교육부 1주기 정원감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4> 2013년 대비 정원 감축 대학 지역별 비교

	소재 대학 개수	정원 감축 대학 개수	2013년 입학정원 대비 입학정원 감축비율
서울	39	19 (49%)	2.1%
수도권(서울경기인천)	71	40 (56%)	4.6%
지방권	121	101 (83%)	7.3%
전국 평균	192	141 (73%)	6.4%

한편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정원감축 비율은 큰 차이가 없었다. 전국 163개 4년제 사립 대학의 2013년 대비 2016년 정원감축인원은 2013년 정원 270,041명 대비 17460명 감축되어 평균 6.5% 감축되었고, 29개 국공립대 정원감축인원은 2013년 정원 72,250명 대비 4,407명 감축되어 평균 6.1%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부 정책이 지역거점 교육기관으로서의 지방 국공립대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교육부의 1주기 정원감축 정책은 지방대학 죽이기나 다름이 없었다. 지방과 수도권 대학의 인원감축 비율에서 그 문제가 크게 도드라졌으며 국립대에 대한 보호가 없는 상황도 결국 지역거점대학마저 흔들어 지방 대학의 입지를 약하게 만들고 있던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표5> 전국 16개 시도별 4년제 일반대학의 2013년 대비 정원감축비율

	소재 대학 수 (개)	정원감축 대학 수 (개)	각 지역별 평균 입학정원 감축 수 (명)	2013년 입학 정원 (명)	2016년 입학 정원 (명)	입학정원 감축량 (명)	2013년 대비 감축비율 (%)
전북	10	8	203	18,355	16,321	2,034	11.1%
광주	9	7	160	15,682	14,246	1,436	9.2%
경북	19	15	131	28,477	25,985	2,492	8.8%
전남	10	7	71	8,153	7,446	707	8.7%
경기	29	18	105	39,764	36,716	3,048	7.7%
부산	12	12	201	31,656	29,243	2,413	7.6%
대전	10	8	142	19,299	17,877	1,422	7.4%
경남	10	9	117	16,066	14,901	1,165	7.3%
강원	9	9	145	18,313	17,008	1,305	7.1%
충남	17	14	127	30,680	28,529	2,151	7.0%
제주	2	1	45	3,124	2,934	190	6.1%
충북	10	8	102	17,089	16,068	1,021	6.0%
대구	2	2	243	9,843	9,357	486	4.9%
인천	3	3	87	6,409	6,149	260	4.1%
울산	1	1	92	2,846	2,754	92	3.2%
서울	39	19	42	76,535	74,890	1,645	2.1%
합계	192	141	평균 114	342,291	320,424	21,867	평균 6.4%

2. 지방대학 죽이기 - 전문대 대학정원감축 결과를 중심으로

대학정원감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2013년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2016년 전국 137개 전문대 대학입학정원은 18,906명이 감축되었다. 2013년 입학정원은 196,567명이었으나 2016년에는 177,634명으로 줄어든 것이다. 전국적으로는 2013년 입학정원 대비 2016년 평균 10.35%의 입학정원 감축이 있었고 각 대학별로 평균 137명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전문대 137개 중 2013년 대비 2016년 입학정원이 줄어든 대학은 총 129개로 전체 전문대 비율의 94.1%로 나타나 10개 대학 중 9개 대학이 정원을 감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3년 대비 2016년 감축된 인원 18,906명 중 지방대(수도권 이외) 88개 대학에서 13,878명이 감축되어 총 감축인원의 73.4%가 지방소재 대학에서 줄어들었다. 전국 전문대의 31.1%, 입학정원 총원의 42.4%를 수도권 소재대학이 점유하고 있지만 실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42개 대학 정원감축인원은 5,028명이 감축되어 총 감축비율의 26.6%에 머물렀고, 특히 서울은 824명으로 총 감축인원 수의 4%에 그쳤다.

또한 인원이 감축된 대학 중 100명 이상 감축된 대학은 70개 대학으로 21개 대학(30%)이 수도권(서울 2개, 인천 2개, 경기 17개), 49개 대학(70%)이 수도권 이외 지방소재 대학으로 나타났으며 지방대는 평균 242명의 정원을 감축한 반면에 수도권은 평균 195명에 그쳤다. 한편 정원 변동이 없는 대학은 총 7개(5.1%)였으며 입학정원이 늘어난 대학은 1군데에 불과했다.

<표6> 2013년 대비 입학정원 변동이 없거나 늘어난 대학

학교명	설립유형	지역	입학정원				입학정원 감축량(A-B)
			2013(A)	2014	2015	2016(B)	
배화여자대학교	사립	서울	1,304	1,304	1,304	1,304	0
상지영서대학교	사립	강원	1,291	1,291	1,291	1,291	0
성덕대학교	사립	경북	625	625	625	625	0
영남외국어대학교	사립	대구	480	480	480	480	0
웅지세무대학교	사립	전북	666	666	666	666	0
인덕대학교	사립	인천	2,401	2,401	2,401	2,401	0
한국복지대학교	국립	경기	171	171	221	211	-40

2013년 대비 2016년 입학정원 감축 비율은 전국 평균 10.35%(각 대학별 평균 137명)이었다. 하지만 전국을 17개 지역별로 나눠 분석한 결과, 지방소재 전문대의 정원감축은 수도권, 특히 서울에 비해 심각하게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17개 지역 중 평균보다 높은 비율의 정원감축이 이뤄진 곳은 총 8개 지역이었으며 그 중 가장 많은 비율이 감축된 경북은 감축비율이 19.6%로 15개 대학에서 2,733명의 인원이 줄어들었다. 전북 다음으로는 충북(15.9%), 세종(15.2%), 광주(14.1%) 순이었으며 지방권의 평균 감축비율은 11.3%, 평균 144명이 감축되었다.

반면에 서울은 평균 5%, 평균 92명 단축, 인천은 5.5%, 96명 감축에 그쳤다. 수도권으로 넓혔을 경우에도 평균 5.8%(평균 105명) 감축에 머물러, 지방소재 대학이 교육부 1주기 정원감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7> 2013년 대비 정원 감축 대학 지역별 비교

	소재 대학 개수	정원 감축 대학 개수	2013년 입학정원 대비 입학정원 감축비율
서울	9	9(100%)	5%
수도권(서울경기인천)	43	41 (95%)	5.8%
지방권	94	89 (94.6%)	11.3%
전국 평균	137	130(94.8%)	10.35%

한편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정원감축 비율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전국 137개 전문대의 2013년 대비 2016년 정원감축인원은 2013년 정원 192,531명 대비 18,631명 감축되어 평균 9.7% 감축되었고, 8개 국공립대 정원감축인원은 2013년 정원 4,036명 대비 302명 감축되어 평균 7.5%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전문대 역시 지방대의 인원감축 비율이 수도권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4년제 대학에 비해 수도권 지방 가리지 않고 전반적인 인원감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차이가 있었지만 그 비율은 4년제 대학의 현황과 크게 차이가 없었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인원감축 현황을 비교해 볼 때 결국 지방대는 최대의 피해자가 되고 있었다.

<표8> 전국 16개 시도별 전문대의 2013년 대비 정원감축비율

	소재 대학 수 (개)	정원감축 대학 수 (개)	각 지역별 평균 입학정원 감축 수 (명)	2013년 입학 정원 (명)	2016년 입학 정원 (명)	입학정원 감축량 (명)	2013년 대비 감축비율 (%)
전북	8	7	68	7,417	6,875	542	8.8%
광주	6	6	179	7,657	6,584	1,073	14.1%
경북	16	15	171	13,948	11,215	2,733	19.6%
전남	9	9	139	12,025	10,777	1,248	10.4%
경기	31	30	127	58,488	54,544	3,944	6.8%
부산	9	9	226	15,273	13,241	2,032	13.3%
대전	4	4	135	8,125	7,586	539	6.7%
경남	10	10	131	9,436	8,124	1,312	14%
강원	9	7	51	6,363	5,904	459	7.3%
충남	6	6	166	8,997	7,999	998	11.1%
세종	1	1	218	1,437	1,219	218	15.2%
제주	2	2	99	2,473	2,276	197	8%
충북	5	5	196	7,607	6,403	1,177	15.9%
대구	7	6	169	12,158	10,978	1,180	9.8%
인천	3	2	96	5,255	4,968	287	5.5%
울산	2	2	72	3,249	3,106	143	4.5%
서울	9	8	92	16,659	15,835	824	5%
합계	137	129	평균 137명	196,567	177,634	18,906	평균 10.35%

3. 정원 외 모집 분석(1) - 대학 정원감축의 탈출구

□ 박근혜 정부는 2013년 8월,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을 발표,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입학전형을 정원 내·외에서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3년 이후 정원 외 특별전형에서 기회균형선발은 오히려 축소된 것으로 나타남. 뿐만 아니라 서울 주요 대학들은 정원 내 기회균형선발도 기피하고 있어 정부정책이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일반·산업·교육대 190교(국·공·사립) 대상으로 '2013년, 2016년 정원 외 특별전형 및 기회균형선발' 결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나타남.

'13년 대비 '16년 정원 외 특별전형

기회균형선발 4,628명 ↓ 재외국민(외국인) 3,946명 ↑

□ 대학은 사회적 배려자와 재외국민 및 외국인 등 일부 대상자에 한하여 정원 외 모집을 하고 있음.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거나 외국에서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과 장애인은 모집에 제한이 없음.

□ 이외에 교포자녀, 해외근무 공무원 및 기업직원 자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는 입학정원의 2% 이내, 농어촌 학생·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특성화고 졸업자·산업체근무경력 재직자 등 기회균형선발인원은 입학정원의 11% 이내에서 모집이 허용됨. 산업체 위탁생 등 각종 위탁생의 정원은 교육부장관이 결정함.

□ 이 밖에도 현재 대학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서해 5도 학생, 단원고 졸업생, 계약학과 학생을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음.¹⁾

1) 이 보도자료에서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한 정원 외 특별전형만 분석대상으로 함.

〈표1〉 정원의 특별전형 총학생수 기준(2016년 현재)

구분		연도별 입학정원 대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대비	
재외국민 및 외국인(제6,7호 대상자 제외)		2%			10%	의대 5%, 교대·원격대 20%
북한 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6호)		제한없음			제한없음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외국인		제한없음			제한없음	
장애인		제한없음			제한없음	
기회균형선발	농어촌 학생	11%	5.5%	4%	10%	의과대학 각각 5%, 교대·원격대 각각 20%
	특성화고 졸업자			1.5%	10%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20%	
	산업체근무경력 재직자			-	-	
산업체 위탁생 및 기타 위탁생		교육부장관이 결정			교육부장관이 결정	

주1) 2013년 기준도 동일함

주2) '-'는 기준없음

※자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별표1]

□ 2013년 대비 2016년 정원 외 특별전형 모집인원은 2013년 3만 5,614명에서 2016년 3만 5,583명으로 31명 줄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문제는 기회균형선발이 대폭 줄었다는 점임. 2013년 대비 2016년 기회균형선발 관련 모집인원은 2013년 2만 6,845명에서 2만 2,217명으로 4,628명(12.9%) 줄었음. 내역별로 보면 산업체 근무경력 재직자를 제외한 농어촌 학생,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특성화고 졸업자 모집인원이 모두 줄었음.

□ 이에 반해 재외국민 및 외국인 모집인원은 2013년 7,262명에서 2016년 1만 1,208명으로 3,946명(11.1%) 증가함.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과 북한이탈자 자녀가

2,627명(7.4%) 증가했으며, 2% 이내로 제한된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1,238명(3.5%), 전과정 해외이수자는 81명(0.2%) 늘었음.

〈표2〉 2013년 대비 2016년 정원 외 특별전형 모집인원 내역별 변동현황

(단위 : 인원, %)

구분		2013년(a)		2016년(b)		증감(b-a)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재외국민 및 외국인	재외국민 및 외국인(2% 이내)	3,242	9.1	4,480	12.6	1,238	3.5
	전과정 해외이수 재외국민 및 외국인	981	2.8	1,062	3.0	81	0.2
	부모모두 외국인(북한이탈자 포함)	3,039	8.5	5,666	15.9	2,627	7.4
	소계(A)	7,262	20.4	11,208	31.5	3,946	11.1
장애인(B)		1,219	3.4	1,526	4.3	307	0.9
기회균형 선발	농어촌 학생	11,849	33.3	9,931	27.9	- 1,918	- 5.4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4,628	13.0	4,376	12.3	- 252	- 0.7
	특성화고 졸업자	7,134	20.0	3,333	9.4	- 3,801	- 10.7
	산업체 근무경력 재직자	3,234	9.1	4,577	12.9	1,343	3.8
	소계(C)	26,845	75.4	22,217	62.4	- 4,628	- 12.9
산업체 및 기타위탁생(D)		288	0.8	632	1.8	344	1.0
합계(A+B+C+D)		35,614	100.0	35,583	100.0	- 31	-

주1)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한 정원의 특별전형 대상

주2) 190교 일반산업·교대 대상(국공·사립)

수도권 소재 대학, 기회균형선발에 인색

수도권 9,297명(55.5%), 지방 1만 3,078명(68.6%)

□ 정원 외 특별전형에서 기회균형선발을 외면하고 재외국민 및 외국인을 선호하는 현상은 수도권 대학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2016년 수도권 대학 정원 외 특별전형에서 기회균형 선발이 차지하는 비중은 55.5%로, 68.6%를 차지하는 지방대 기회균형 선발 비율보다 13.1% 낮음.

□ 반면, 수도권 대학 정원 외 특별전형에서 전체 재외국민 및 외국인 선발 비중은 41.2%로, 23.%를 차지하는 지방대학 보다 18.1%가 높음. 이 밖에 수도권 대학의 장애인과 산업체 및 기타 교육위탁생 선발비율도 전체 정원 외 모집인원의 각각 3.0%, 0.3%에 불과해 5.4%, 3.0%를 차지하는 지방대와 차이를 드러냄. 수도권 대학의 정원 외 특별전형이 지방대학에 비해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쏠려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3〉 2016년 수도권 대비 지방 정원의 특별전형 모집인원 내역별 비교

(단위 : 명, %)

구분		수도권(a)		지방(b)		증감(a-b)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재 외 국 민 및 외 국 인	재외국민 및 외국인(2% 이내)	2,147	12.8	2,393	12.6	- 246	0.3
	전과정 해외이수 재외국민 및 외국인	944	5.6	120	0.6	824	5.0
	부모모두 외국인(북한이탈자 포함)	3,804	22.7	1,875	9.8	1,929	12.9
	소계(A)	6,895	41.2	4,388	23.0	2,507	18.1
장애인(B)		505	3.0	1,021	5.4	- 516	- 2.3
기 회 균 형 선 발	농어촌 학생	3,664	21.9	6,313	33.1	- 2,649	- 11.2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1,508	9.0	2,889	15.2	- 1,381	- 6.2
	특성화고 졸업자	1,278	7.6	2,067	10.8	- 789	- 3.2
	산업체 근무경력 재직자	2,847	17.0	1,809	9.5	1,038	7.5
	소계(C)	9,297	55.5	13,078	68.6	- 3,781	- 13.1
산업체 및 기타위탁생(D)		57	0.3	575	3.0	- 518	- 2.7
합계(A+B+C+D)		16,754	100.0	19,062	100.0	- 2,308	-

주1) 본교(캠퍼스) 모집인원은 본교 소재지에 본교(캠퍼스) 모집인원은 본교 소재지에 포함

주2) 192교 일반산업·교대 대상(국공사립)

서울 주요대학 10곳 중 7곳, '13년 대비 '16년 기회균형 선발 인원 낮춰

□ 특히 서울 주요대학이 정원 외 특별전형에서 기회균형 선발을 줄인 것으로 나타남. 서울 주요대학 10곳의 2013년 대비 2016년 정원 외 특별전형 모집인원을 비교한

결과, 경희대, 중앙대(본교), 홍익대(본교)를 제외한 7곳 모두 기회균형 선발 인원을 줄인 것으로 나타남. 2013년에 비해 기회균형선발 인원을 가장 많이 줄인 대학은 2013년 241명에서 2016년 184명으로 57명을 줄인 성균관대이며, 그 다음은 51명을 줄인 연세대(본교), 45명을 줄인 건국대(본교)임.

□ 반면 이들 대학 중 서울대와 건국대(본교)를 제외한 8곳은 재외국민 및 외국인 선발 인원을 크게 늘렸음. 경희대는 2013년 318명에서 2016년 715명으로 397명을 늘렸으며, 고려대(본교)는 같은 기간 316명을 늘렸음. 다음으로 중앙대(본교)는 160명, 성균관대가 124명, 연세대(본교)가 117명 확대했음.

〈표4〉 2013년 대비 2016년 서울 주요대학 정원의 특별전형 모집인원 비교

(단위 : 명, %)

대학명		2013년(A)			2016년(B)			증감(B-A)		
		재외 국민	기회균형 선발	전체	재외 국민	기회균형 선발	전체	재외 국민	기회균형 선발	전체
연세대 (서울)	인원	235	235	486	352	184	551	117	- 51	65
	비율	48.4	48.4	100.0	63.9	33.4	100.0	15.5	- 15.0	0.0
고려대 (서울)	인원	261	277	575	577	238	852	316	- 39	277
	비율	45.4	48.2	100.0	67.7	27.9	100.0	22.3	- 20.2	0.0
경희대	인원	318	339	677	715	392	1,127	397	53	450
	비율	47.0	50.1	100.0	63.4	34.8	100.0	16.5	- 15.3	0.0
한양대 (본교)	인원	248	317	577	336	308	656	88	- 9	79
	비율	43.0	54.9	100.0	51.2	47.0	100.0	8.2	- 8.0	0.0
중앙대 (본교)	인원	173	465	643	333	477	817	160	12	174
	비율	26.9	72.3	100.0	40.8	58.4	100.0	13.9	- 13.9	0.0
건국대 (본교)	인원	137	280	437	60	235	315	- 77	- 45	- 122
	비율	31.4	64.1	100.0	19.0	74.6	100.0	- 12.3	10.5	-
서울대	인원	100	203	307	63	164	245	- 37	- 39	- 62
	비율	32.6	66.1	100.0	25.7	66.9	100.0	- 6.9	0.8	-
성균관 대	인원	392	241	643	516	184	710	124	- 57	67
	비율	61.0	37.5	100.0	72.7	25.9	100.0	11.7	- 11.6	0.0
홍익대 (본교)	인원	107	270	377	120	271	391	13	1	14
	비율	28.4	71.6	100.0	30.7	69.3	100.0	2.3	- 2.3	0.0
이화여 대	인원	165	189	369	226	166	407	61	- 23	38
	비율	44.7	51.2	100.0	55.5	40.8	100.0	10.8	- 10.4	0.0

주) 합계 : 재외국민 및 외국인, 기회균형선발, 장애인, 산업체 및 기타위탁생 포함

서울 주요대학, 정원 내에서도 기회균형 선발 거의 하지 않아

- 기회균형선발을 정원내로 확대하여 살펴봐도 이들 대학은 정원 내에서 기회균형선발을 거의 하지 않고 있음. 2016년 경희대, 한양대(본교), 중앙대(본교)가 195명, 115명, 91명을 정원 내에서 선발하고 있는 것 외에 나머지 대학은 극소수로 선발하고 있음. 그나마 서울대와 성균관대는 정원 내에서 기회균형선발을 전혀 하지 않고 있음. 또한 10곳 중 6곳은 2013년에 비해 2016년 총입학자 대비 기회균형 선발 비율이 줄어들었음.

〈표5〉 2013년 대비 2016년 서울 주요대학 기회균형 선발 비교

(단위 : 명, %)

대학명	2013년					2016년				
	총입학자 (A)	기회균형 선발자			비율 (B/A)	총입학자 (C)	기회균형 선발자			비율 (D/C)
		정원외	정원내	합계 (B)			정원외	정원내	합계 (D)	
연세대(본교)	3,888	249	40	289	7.4	3,916	203	31	234	6.0
고려대(본교)	4,314	252	13	265	6.1	4,588	229	24	253	5.5
경희대	5,426	345	63	408	7.5	5,789	402	195	597	10.3
한양대(본교)	3,445	296	34	330	9.6	3,460	315	115	430	12.4
중앙대(본교)	3,407	465	11	476	14.0	4,048	471	91	562	13.9
건국대(본교)	3,400	277	40	317	9.3	3,536	243	47	290	8.2
서울대	3,308	196	0	196	5.9	3,419	163	0	163	4.8
성균관대	4,142	224	4	228	5.5	4,100	186	0	186	4.5
홍익대(본교)	2,772	205	12	217	7.8	2,839	249	20	269	9.5
이화여대	3,316	165	19	184	5.5	3,424	183	41	224	6.5

주1) 정원 외 기회균형선발자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특성화고 졸업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농어촌 학생, 북한 이탈주민, 장애인 등 대상자, 서해5도 학생, 단원고 / 정원 내 기회균형선발자 : 고른기회전형,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대학 독자적 기준에 따른 선발

주2) 등록학생 기준

사회적 약자배려 의미 퇴색한 정원 외 특별전형 근본대책 필요

- 박근혜 정부는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에서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대입전형 확대'를 제시한 바 있음. 그러나 정원 외 특별전형에서 기회균형 특별전형은

점차 축소되고 있고, 기회균형 선발의 모범을 보여야 할 수도권 주요대학은 정원 외뿐만 아니라 정원 내 기회균형선발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교육부는 기회균형선발 축소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함.

- 특히 주요대학 중심으로 정원 외 특별전형에서 기회균형선발 비율이 크게 낮아짐에 따라 놓여준 학생이나 저소득층 학생에게 대학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정원 외 특별전형의 순기능이 약화되고 있음.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면 정원 외 특별전형은 대학들의 신입생 및 재정확보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으므로 정원 외 특별전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부는 2023학년도까지 16만 명의 정원을 감축한다는 목표 아래 대학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 발표 이후 2016년 현재까지 정원감축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앞서 1.2에서 살펴본 대학정원감축결과는 효과적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정작 수도권 소재 대학은 ‘정원 외 모집’ 전형을 이용하여 구조조정으로 줄어드는 입학인원을 다시 채우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서 정원 외 모집 정원이란 무엇인가? 정원 외 모집정원(이하 정원 외 정원)이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29조 2항에 근거하여 재외국민·외국인, 농어촌 지역학생, 북한이탈주민, 산업체 근무 경력자 등 정원 외로 선발한 정원을 말한다. 정원 내 정원은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에 의해 정원감축대상이 되지만, 정원 외 정원은 일부 대상자를 제외하고 제한을 받지 않아 대학이 구조조정의 피해를 상쇄시키는 용도로 이용될 소지가 다분한 영역이다.

그렇다면 대학은 정원 외 정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2013년·2016년 입학전형 유형별 선발결과’를 전수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국·공·사립대(일반 및 산업, 교육대) 정원 내 모집인원은 2013년 34만 5,054명에서 2016년 32만 5,317명으로 1만 9,737명이 줄었다. 하지만 정원 외 모집인원은 2013년 3만 7,041명에서 2016년 3만 9,982명으로 2,941명 늘어났다. 이를 비율로 보면 2016년 정원 내 모집인원은 2013년에 비해 5.7% 줄어든 반면, 정원 외 모집인원은 7.9%가 늘어난 것이다.

<표9> 2013년 대비 2016년 정원 내·외 모집인원 증감현황

(단위 : 명, %)

구분	2013년	2016년	증감	증감율
정원내	345,054	325,317	- 19,737	- 5.7
정원외	37,041	39,982	2,941	7.9
합계	382,095	365,299	- 16,796	- 4.4

주) 국·공·사립대(일반 및 산업, 교대 포함) 190교 대상

이러한 정원 외 정원 확대를 통해 정원감축을 피하는 현상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많이 나타났으며, 특히 서울소재 대학이 현행 「고등교육법」이 허용하는 정원 외 규정을 이용하여 정원감축을 기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4년제 대학은 2013년 대비 2016년에 정원 내 11,961명을 감축했고 정원 외 모집에서도 242명이 감소하였지만, 서울 소재 대학은 정원 내 모집인원이 오히려 729명 늘었고 정원 외 정원에서는 2,430명의 신입생을 더 선발하였다. 비율로 살펴보면 서울 소재 대학들은 대학구조개혁 추진 이후 오히려 23%의 신입생을 더 선발했지만 광역시 외 지역의 일반 지방대학은 정원의 7.4%가 감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10> 2013년 대비 2016년 지역별 정원내외 모집인원 증감현황

(단위 : 명, %)

구분		2013년		2016년		증감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외	증감인원		증감율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외
수도권	서울	72,760	10,633	73,489	13,063	729	2,430	1.0	22.9
	경기·인천	47,471	5,522	43,588	6,040	- 3,883	518	- 8.2	9.4
	소계	120,231	16,155	117,077	19,103	- 3,154	2,948	- 2.6	18.2
지방	광역시	82,463	7,607	77,841	7,842	- 4,622	235	- 5.6	3.1
	광역시외	142,360	13,279	130,399	13,037	- 11,961	- 242	- 8.4	- 1.8
	소계	224,823	20,886	208,240	20,879	- 16,583	- 7	- 7.4	- 0.0
합계		345,054	37,041	325,317	39,982	- 19,737	2,941	- 5.7	7.9

주1) 본교(캠퍼스) 모집인원은 본교 소재지에 분교 및 캠퍼스 모집인원은 분교 및 캠퍼스 소재지에 포함

서울지역과 대규모 대학에서 정원 외 정원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서울지역 소재한 재학생 2만명 이상 10개 대학(본교)의 2013년 2016년 정원 내·외 모집인원을 비교해보았다. 총 8개 대학의 정원 외 모집인원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경희대가 13년 대비 458명이 증가하여 가장 큰 67.7%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고려대 280명(46.3%), 중앙대 173명(26.8%) 순으로 정원 외 모집인원 비율이 증가하였다.

또한 10개 대학 가운데 정원 내 모집인원이 줄어든 대학은 6개 대학 뿐이었으며 정원 외 모집인원을 감안하면 정원 내·외 모집인원이 줄어든 대학은 4개 대학에 불과하였다. 경희대와 연세대, 고려대는 정원 내 인원은 감소하였으나 정원 외 모집인원을 합산하니 오히려 모집인원이 증가하였으며, 이화여대와 중앙대, 홍익대는 정원 내·외 모집인원을 모두 늘렸다.

<표11> 2013년 대비 2016년 서울 주요대학 정원내외 모집인원 증감현황

(단위 : 명, %)

구분	2013년			2016년			증감					
	정원내	정원외	전체	정원내	정원외	전체	증감인원			증감율		
							정원내	정원외	전체	정원내	정원외	전체
연세대(본교)	3,413	486	3,899	3,381	553	3,934	-32	67	35	-0.9	13.8	0.9
고려대(본교)	3,793	605	4,398	3,771	885	4,656	-22	280	258	-0.6	46.3	5.9
경희대	4,822	677	5,499	4,819	1,135	5,954	-3	458	455	-0.1	67.7	8.3
한양대(본교)	2,917	577	3,494	2,826	656	3,482	-91	79	-12	-3.1	13.7	-0.3
중앙대(본교)	2,791	646	3,437	3,264	819	4,083	473	173	646	16.9	26.8	18.8
건국대(본교)	3,011	437	3,448	3,016	315	3,331	5	-122	-117	0.2	-27.9	-3.4
서울대	3,171	307	3,478	3,090	247	3,337	-81	-60	-141	-2.6	-19.5	-4.1
성균관대	3,451	723	4,174	3,332	796	4,128	-119	73	-46	-3.4	10.1	-1.1
홍익대(본교)	2,480	377	2,857	2,506	401	2,907	26	24	50	1.0	6.4	1.8
이화여대	2,994	369	3,363	3,035	427	3,462	41	58	99	1.4	15.7	2.9

주1) 서울지역 재학생 2만 명(본분교 합산) 이상 대학의 본교 모집인원

주2) 중앙대(본교)의 정원내외 모집인원 증가는 본분교통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됨.

이처럼 수도권, 특히 서울권의 대형 대학들은 정원 외 모집전형을 이용하여 구조조정
으로 감축된 인원을 충당하고 있었다.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활용하여
정원 늘리기 수단으로 이를 사용하고 구조조정의 압박에서의 탈출구로 이용하고 있던
것이다.

4. 정원 외 모집 분석(2) - 기회균형선발, 재외국인(외국인)전형

물론 정원 외 정원 대상에는 교육 소외계층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에 정원 외 정
원수의 증가만을 가지고 비판할 수는 없다. 하지만 문제는 교육여건의 뒷받침 없
이 정원 외 정원의 증가는 등록금 재원확충의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을 피하
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서울지역 2만명 이상 규모(재학생 기준) 대학의 본
교 전임교원 확보 현황을 살펴보면 재학생 기준 교원확보율 100%를 넘는 대학(법
정기준 준수대학)은 서울대와 성균관대 두 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학교는 재학생
기준 교원 1인당 편제정원이 20명 넘는 곳이 대부분이었고 편제정원에 비해 재학
생 수도 1~4명 더 많았다. OECD 평균 고등교육기관 교원 1인당 학생수가 15명
임을 감안하면 서울지역 주요대학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대폭 줄여야 하는 상
황이나 학교는 편제정원 확보없이 학생 수만 더 늘리고 있는 실정이었다. 실례로
연세대와 고려대는 정원 외 모집정원을 각각 13.8%, 46.3%나 늘렸지만 재학생
기준 전임교원 확보율은 89%, 90%에 그쳤다.

<표12> 2015년 서울지역 주요대학 전임교원 확보 현황

(단위 : %, 명)

구분	전임교원 확보율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편제정원(A)	재학생(B)	차이 (B-A)	편제정원(A)	재학생(B)	차이 (B-A)
연세대(본교)	107	89	- 18	19	22	4
고려대(본교)	101	90	- 11	21	24	3
경희대	90	77	- 12	21	25	4
한양대(본교)	91	81	- 10	23	26	3
중앙대(본교)	88	77	- 12	24	28	4
건국대(본교)	77	68	- 9	27	31	4
서울대	132	118	- 14	14	16	2
성균관대	119	101	- 17	18	21	3
홍익대(본교)	73	66	- 7	29	32	3
이화여대	91	88	- 3	23	24	1

주)서울지역 재학생 2만 명(본분교 합산) 이상 대학의 본교기준

또 다른 문제는 정원 외 특별전형 내에서 발생한다. 대학은 사회적 배려자와 재외국민 및 외국인 등 일부 대상자에 한하여 정원 외 모집을 하고 있다. 그 구조를 살펴보면 우선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거나 외국에서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과 장애인은 모집에 제한이 없다. 이 외에 교포자녀, 해외근무 공무원 및 기업직원 자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는 입학정원의 2% 이내로 선발하며 농어촌 학생·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특성화고 졸업자, 산업체근무경력 재직자 등 기회균형선발인원은 입학정원의 11% 이내에서 모집이 허용되고 있다. 이 밖에도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등에 근거하여 해당 학생을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다.²⁾

<표13> 정원의 특별전형 총학생수 기준(2016년 현재)

구분		연도별 입학정원 대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대비	
재외국민 및 외국인(제6,7호 대상자 제외)		2%			10%	의대 5%, 교대·원격대 20%
북한 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6호)		제한없음			제한없음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외국인		제한없음			제한없음	
장애인		제한없음			제한없음	
기회균형선발	농어촌 학생	11%	5.5%	4%	10%	의과대학 각각 5%, 교대·원격대 각각 20%
	특성화고 졸업자			1.5%	10%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20%	
	산업체근무경력 재직자			-	-	
산업체 위탁생 및 기타 위탁생		교육부장관이 결정			교육부장관이 결정	

주1) 2013년 기준도 동일함

주2) '-'는 기준없음

※자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별표1]

2) 이 보도자료에서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한 정원 외 특별전형만 분석대상으로 함.

일반·산업·교육대 190교(국·공·사립) 대상으로 '2013년, 2016년 정원 외 특별전형 및 기회균형선발' 결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2013년 대비 2016년 전국 대학교 정원 외 특별전형 모집인원은 2013년 3만 5,614명에서 2016년 3만 5,583명으로 31명 줄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문제는 기회균형 선발 인원이 대폭 감소하였다는 것이다. 2013년 대비 2016년 기회균형선발 관련 모집인원은 2013년 2만 6,845명에서 2만 2,217명으로 4,628명(12.9%)이 줄었다. 내역별로 살펴보면 산업체 근무경력 재직자를 제외한 농어촌 학생,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특성화고 졸업자 모집인원이 모두 감소했다. 박근혜 정부가 2013년 8월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입학전형을 정원 내·외에서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인원이 축소된 것이다.

이에 반해 재외국민 및 외국인 모집인원은 2013년 7,262명에서 2016년 1만 1,208명으로 3,946명(11.1%) 증가하였다.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과 북한이탈자 자녀가 2,627명(7.4%) 증가했으며, 2% 이내로 제한된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1,238명(3.5%), 전과정 해외이수자는 81명(0.2%) 증가하였다.

<표14> 2013년 대비 2016년 정원 외 특별전형 모집인원 내역별 변동현황

(단위 : 인원, %)

구분		2013년(a)		2016년(b)		증감(b-a)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재외국민 및 외국인	재외국민 및 외국인(2% 이내)	3,242	9.1	4,480	12.6	1,238	3.5
	전과정 해외이수 재외국민 및 외국인	981	2.8	1,062	3.0	81	0.2
	부모모두 외국인(북한이탈자 포함)	3,039	8.5	5,666	15.9	2,627	7.4
	소계(A)	7,262	20.4	11,208	31.5	3,946	11.1
장애인(B)		1,219	3.4	1,526	4.3	307	0.9
기회균형선발	농어촌 학생	11,849	33.3	9,931	27.9	-1,918	-5.4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4,628	13.0	4,376	12.3	-252	-0.7
	특성화고 졸업자	7,134	20.0	3,333	9.4	-3,801	-10.7
	산업체 근무경력 재직자	3,234	9.1	4,577	12.9	1,343	3.8
	소계(C)	26,845	75.4	22,217	62.4	-4,628	-12.9
산업체 및 기타위탁생(D)		288	0.8	632	1.8	344	1.0
합계(A+B+C+D)		35,614	100.0	35,583	100.0	-31	-

주1)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한 정원의 특별전형 대상

주2) 190교 일반산업·교대 대상(국공사립)

정원 외 특별전형에서 기회균형선발을 외면하고 재외국민 및 외국인을 선호하는 현상은 수도권 대학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016년 수도권 대학 정원 외 특별전형에서 기회균형 선발인원은 9,297명으로 55.5%의 비중을 차지했지만, 지방대는 1만 3,078명으로 총 정원 외 특별전형 인원 중에서 68.6%를 차지하였다. 지방대에 비해 무려 13.1% 낮은 비율이다. 반면에 수도권 대학 정원 외 특별전형에서 전체 재외국민 및 외국인 선발인원은 13,790명으로 41.2%를 차지했으나 지방대는 8,776명으로 전체 비중의 23.1%만을 차지하였다. 이는 수도권 대학 정원 외 특별전형 인원 중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형 차지하는 비중이 지방대학 보다 18.1%가 높은 결과였다.

이 밖에 수도권 대학의 장애인과 산업체 및 기타 교육위탁생 선발비율도 전체 정원 외 모집인원의 각각 3.0%, 0.3%에 불과해 5.4%, 3.0%를 차지하는 지방대와 차이를 드러냈다. 수도권 대학의 정원 외 특별전형이 지방대학에 비해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형에 쏠려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표15> 2016년 수도권 대비 지방 정원의 특별전형 모집인원 내역별 비교

(단위 : 명, %)

구분		수도권(a)		지방(b)		증감(a-b)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재외국민 및 외국 인	재외국민 및 외국인(2% 이내)	2,147	12.8	2,393	12.6	- 246	0.3
	전과정 해외이수 재외국민 및 외국 인	944	5.6	120	0.6	824	5.0
	부모모두 외국인(북한이탈자 포함)	3,804	22.7	1,875	9.8	1,929	12.9
	소계(A)	6,895	41.2	4,388	23.0	2,507	18.1
장애인(B)		505	3.0	1,021	5.4	- 516	- 2.3
기회균형 선발	농어촌 학생	3,664	21.9	6,313	33.1	- 2,649	-11.2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1,508	9.0	2,889	15.2	- 1,381	- 6.2
	특성화고 졸업자	1,278	7.6	2,067	10.8	- 789	- 3.2
	산업체 근무경력 재직자	2,847	17.0	1,809	9.5	1,038	7.5
	소계(C)	9,297	55.5	13,078	68.6	- 3,781	-13.1
산업체 및 기타위탁생(D)		57	0.3	575	3.0	- 518	- 2.7
합계(A+B+C+D)		16,754	100.0	19,062	100.0	- 2,308	-

주1) 본교(캠퍼스) 모집인원은 본교 소재지에 본교(캠퍼스) 모집인원은 본교 소재지에 포함

주2) 192교 일반산업교대 대상(국공사립)

특히 서울 주요대학들은 정원 외 특별전형에서 기회균형 선발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주요대학 10곳의 2013년 대비 2016년 정원 외 특별전형 모집인원을 비교한 결과, 경희대, 중앙대(본교), 홍익대(본교)를 제외한 7곳의 대학교 모두 기회균형 선발 인원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 비해 기회균형선발 인원을 가장 많이 줄인 대학은 2013년 241명에서 2016년 184명으로 57명을 줄인 성균관대였으며 그 다음은 51명을 줄인 연세대(본교), 45명을 줄인 건국대(본교) 순이었다.

반면 이들 대학 중 서울대와 건국대(본교)를 제외한 8곳은 재외국민 및 외국인 선발인원을 크게 늘렸다. 경희대는 2013년 318명에서 2016년 715명으로 397명을 늘렸으며, 고려대(본교)는 같은 기간 316명을 늘렸다. 그 다음으로는 중앙대(본교) 160명, 성균관대 124명, 연세대(본교)가 117명을 확대함으로써 재외국민전형의 비율을 높였다.

<표16> 2013년 대비 2016년 서울 주요대학 정원의 특별전형 모집인원 비교

(단위 : 명, %)

대학명		2013년(A)			2016년(B)			증감(B-A)		
		재외국민	기회균형선발	전체	재외국민	기회균형선발	전체	재외국민	기회균형선발	전체
연세대 (서울)	인원	235	235	486	352	184	551	117	- 51	65
	비율	48.4	48.4	100.0	63.9	33.4	100.0	15.5	- 15.0	0.0
고려대 (서울)	인원	261	277	575	577	238	852	316	- 39	277
	비율	45.4	48.2	100.0	67.7	27.9	100.0	22.3	- 20.2	0.0
경희대	인원	318	339	677	715	392	1,127	397	53	450
	비율	47.0	50.1	100.0	63.4	34.8	100.0	16.5	- 15.3	0.0
한양대 (본교)	인원	248	317	577	336	308	656	88	- 9	79
	비율	43.0	54.9	100.0	51.2	47.0	100.0	8.2	- 8.0	0.0
중앙대 (본교)	인원	173	465	643	333	477	817	160	12	174
	비율	26.9	72.3	100.0	40.8	58.4	100.0	13.9	- 13.9	0.0
건국대 (본교)	인원	137	280	437	60	235	315	- 77	- 45	- 122
	비율	31.4	64.1	100.0	19.0	74.6	100.0	- 12.3	10.5	-
서울대	인원	100	203	307	63	164	245	- 37	- 39	- 62
	비율	32.6	66.1	100.0	25.7	66.9	100.0	- 6.9	0.8	-
성균관 대	인원	392	241	643	516	184	710	124	- 57	67
	비율	61.0	37.5	100.0	72.7	25.9	100.0	11.7	- 11.6	0.0
홍익대 (본교)	인원	107	270	377	120	271	391	13	1	14
	비율	28.4	71.6	100.0	30.7	69.3	100.0	2.3	- 2.3	0.0

이화여 대	인원	165	189	369	226	166	407	61	- 23	38
	비율	44.7	51.2	100.0	55.5	40.8	100.0	10.8	- 10.4	0.0

주) 합계 : 재외국민 및 외국인, 기회균형선발, 장애인, 산업체 및 기타위탁생포함

한편, 기회균형선발을 정원내로 확대하여 살펴봐도 이들 대학은 정원 내에서 기회균형 선발을 거의 하지 않고 있었다. 2016년 경희대, 한양대(본교), 중앙대(본교)가 195명, 115명, 91명을 정원 내에서 선발하고 있는 것 외에 나머지 대학은 극소수의 인원만을 선발하고 있었다. 박근혜 정부가 2013년 8월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입학전형을 정원 내·외에서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서울 주요대학들은 정원 외 뿐만 아니라 정원 내 기회균형선발도 기피하고 있어 정부정책이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표17> 2013년 대비 2016년 서울 주요대학 기회균형 선발 비교

(단위 : 명, %)

대학명	2013년					2016년				
	총입학자 (A)	기회균형 선발자			비율 (B/A)	총입학자 (C)	기회균형 선발자			비율 (D/C)
		정원 외	정원 내	합계 (B)			정원 외	정원 내	합계 (D)	
연세대(본교)	3,888	249	40	289	7.4	3,916	203	31	234	6.0
고려대(본교)	4,314	252	13	265	6.1	4,588	229	24	253	5.5
경희대	5,426	345	63	408	7.5	5,789	402	195	597	10.3
한양대(본교)	3,445	296	34	330	9.6	3,460	315	115	430	12.4
중앙대(본교)	3,407	465	11	476	14.0	4,048	471	91	562	13.9
건국대(본교)	3,400	277	40	317	9.3	3,536	243	47	290	8.2
서울대	3,308	196	0	196	5.9	3,419	163	0	163	4.8
성균관대	4,142	224	4	228	5.5	4,100	186	0	186	4.5
홍익대(본교)	2,772	205	12	217	7.8	2,839	249	20	269	9.5
이화여대	3,316	165	19	184	5.5	3,424	183	41	224	6.5

주1) 정원 외 기회균형선발자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특성화고 졸업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농어촌 학생, 북한 이탈주민, 장애인 등 대상자, 서해5도 학생, 단원고 / 정원 내 기회균형선발자 : 고른기회전형,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대학 독자적 기준에 따른 선발

주2) 등록학생 기준

결론적으로 정원 외 전형인원이라는 현행법의 틈을 악용하여 서울 소재 대학 대부분이 정원을 감축하지 않고 이를 양적팽창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정원 외 특별전형에서 기회균형선발 비율이 크게 낮아짐에 따라 농어촌 학생이나 저소득층 학생에게 대학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정원 외 특별전형의 순기능이 약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면 정원 외 특별전형은 대학들의 신입생 및 재정확보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정원 외 특별전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Part **IV**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문제점

IV.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문제점

1.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 문제³⁾

1) 기존과 달라질 것 없는 평가방식

2015년 평가 방안은 정량지표 중심의 1단계 평가를 통해 그룹1(A,B,C등급)과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그룹2(D,E등급)를 구분하고, 그룹2에 속하는 대학만을 대상으로 2단계 정성평가를 추가하는 방식이다(대학 기준). 기존에 정량평가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을 걸러내고, 이 중 일부를 경영부실대학으로 선정해 경영컨설팅을 실시, 퇴출 대학을 선별해 온 방식과 큰 틀에서 같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구조조정 대상 대학을 걸러내는 1단계 평가인데, 이는 △교육여건 △학사관리 △학생지원 △교육성과 등 4개 항목 12개 지표로 구성된다. 교육부는 이 중 정량지표가 6개, 정성지표가 4개, 정량·정성지표가 2개라고 밝히면서 “기존의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는 정량지표로만 구성되어 수치로는 드러나지 않는 정성적인 측면과 대학의 노력을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2015년 평가 방안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량·정성 지표를 함께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종 확정된 2015년 평가 방안에 따르면, 1단계 평가 총점 60점 가운데 정량 지표 배점이 42점(70%)에 달한다. 교육부가 2014년 9월 1차 공청회(안)에서 호기롭게 선보였던 대다수 정성평가 지표(예>학교운영의 투명한 공개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는 사라졌다. 정량지표 배점이 60%를 차지했던 11월 2차 공청회(안)에 비해서도 충원율, 취업률 등의 배점이 늘면서 정량지표 비중이 더 확대된 기형적인 ‘종합 평가’가 됐다. 충원율·취업률 중심의 대학 평가로 대학 내 기초학문 몰락 및 교육과정의 획일화를 야기해온 기존의 대학 평가 문제점을 고스란히 이어가게 된 것이다. 물론 교육부는 취업률 평가 시 계열별·성비를 고려하고, 권역별로 구분 평가하겠다고 한데 이어 학생 충원율 평가 또한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 평가하겠다는 보완책을 제시했다.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선정 평가의 피해자였던 지방대학들이 지난 4년간 기존 평가 지표 개선에만 힘쓰다 보니 오히려 그와 같은 평가지표를 요구하는 아이러니한 일도 벌어졌다. 결과적으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조조정대상의 지방대 쏠림 현상은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여전히 수도권-지방 간공동 발전을 모색하기에는

3) 아래 자료는 『대교연보고서 2015년 통권 4호』 ‘대학구조조정 현황과 전망’ pp.32-39.에서 발췌했으며, 자료집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해당 문제에 대해 이미 전문성을 갖춘 대학교육연구소의 글을 일부 발췌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자료집의 30~34쪽에 해당함

역부족이다. 또한 정량지표 중심의 획일적 대학평가지표 성과 부풀리기와 기초학문의 붕괴 등 대학의 왜곡된 경쟁과 갈등은 더욱 심화될 우려가 크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의 경우 전문대학과 달리 규모 및 학문분야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 일반대학 평가에서 학문분야가 고려되는 부분은 취업률 평가에서 인문, 예체능, 종교계열이 제외되는 것밖에 없다. 이 외에는 단계별 평가라고 해서 대학 규모 및 학문분야의 다양성이 고려되는 바가 전혀 없다. 더구나 취업률 평가에서 인문·예체능 계열을 제외하는 것이나, 대학과 전문대학을 구분 평가하고 지표 배점 상 차이를 두는 방식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선정평가’에서도 이미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려에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선정 평가는 ‘대학의 특성이나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줄 세우기식 평가로 대학 교육을 더욱 획일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2) 교육의 질 제고와는 무관한 소모적 경쟁 확대 우려

대학에 적용되는 1단계 평가지표(60점) 중 정량지표(42점)만을 적용하여 사립대학모의평가를 실시한 결과, 최하위 2개 대학을 제외하고 ‘1등’과 ‘141등’ 간 점수 격차는 8.3점에 불과하다. 0점대 점수 차이로 등급이 구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대학들이 학생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학생평가제도 개선 등을 밀어붙이는 이유다. 2015년 대학 구조개혁 1단계 평가에서 ‘학생평가’ 영역은 총점 60점 중 4점을 차지한다. 정량평가인 ‘성적분포의 적절성’ 점수가 1점, 정성평가인 ‘엄정한 성적 부여를 위한 제도 운영의 적절성’ 점수가 3점이다. 11월 2차 공청회(안)에서만 해도 성적분포의 적절성 평가(당시 3점)는 점수 산출 방식 상 모든 사립대학이 만점(3점)을 취득하도록 설계되어 크게 변별력을 가지기는 어려운 지표였다. 하지만 최종 확정된 2015년 평가방안에서는 배점은 1점으로 줄어든 반면 평균 지수와의 격차에 따라 감점을 반영시키면서 대학 간 격차가 커졌다. 정성평가 요소로는 △합리적인 성적부여 기준(상대·절대평가 등) △합리적인 재수강 기준(재수강 신청 가능 요건, 재수강 시 부여되는 성적 범위 등) △학사경고 부여 등 기준 수립 및 준수 여부 등이 반영된다. 이렇다보니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앙대는 최근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재수강횟수 3회 제한 △재수강 시 최고 학점 A에서 B+로 조정 △재수강 가능 최저학점 C+에서 D로 조정 △재수강 취득학점에 별도표기 등의 내용을 담은 재수강 제도개선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외대는 2014학년도 2학기부터 이전까지 절대평가로 점수를 매겼던 소규모 강의

(20명 미만)나 원어 강의도 모두 대평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한국외대가 학생들의 반발에도 상대평가 확대방안을 앞당겨 소급 적용하기로 한 것은 대학 구조개혁 평가 시뮬레이션 결과 2학기 성적을 이 같이 매길 경우 D등급에서 C등급으로 등급이 한 단계 오를 것으로 나온 때문으로 알려졌다. 덕성여대는 지난 2학기부터 A학점 비율을 종전 30%에서 20%로 줄였고, 서울여대는 올해부터 모든 원어 강의에 상대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우리 연구소가 진행한 모의평가 결과에서도, 지방의 한 특성화 대학은 교육여건 등 모든 영역에서 월등하게 만점을 획득하고도 성적분포 지표가 만점의 80% 수준에 달하지 못해 A등급을 획득하지 못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A등급을 획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립대학(13교) 가운데 전임교원 확보율의학 제외, 2014년 기준)이 법정 기준을 충족한 대학은 한 곳도 없었다. 오히려 전임교원 확보율이 100% 이상인 대학의 값은 극단 값으로 평균 산출 시 제외(23)됐다. 교육부가 절대평가를 표방하면서도 교사확보율을 제외한 정량지표 만점 기준을 ‘극단 값을 제외한 전국(또는 수도권/지방, 권역별) 평균값’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향은 없이,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학사관리 영역만 획일적 평가 대상으로 전락시켜 대학을 획일화시키고, 소모적인 갈등과 분규만을 양산할 우려가 크다. 정성평가까지 더해지면 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더욱 거세질 것이다. 교육부 일정대로라면, 300여개에 달하는 대학에 대해 ‘서면 및 현장 평가’를 실시하는 기간이 4~5월 중순(1단계), 7월(2단계) 등 총 2달 반밖에 되지 않는다.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매일 하루에 최소 4개 대학 이상을 평가해야 한다. 평가전문가 들도 지적하다시피 정성평가는 대학을 직접 방문평가 하지 않고서는 신뢰도 확보가 불가능한데, 이 같은 촉박한 일정으로 어떻게 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결국 정성평가 또한 사실상 정량평가와 다를 바 없이 수치로 드러나는 실적 중심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3) 지역간 규모별 격차 심화

사립대학 모의평가 결과에 따르면, 하위 그룹(D,E등급)에 속하게 될 대학 중 지방사립대학의 비율은 44.7%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의 대부분이 지방 사립대학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구조조정 대상의 지방대학 쏠림 현상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평균 이상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C~E등급으로 보면 지방대학 비중이 58.4%에 이른다. 반면 정원감축이 자율에 맡겨지는 최우수(A)등

급의 61.5%는 수도권 대학으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향후 구조개혁 3주기 동안 감축될 사립대학 입학정원의 63.6%는 지방대학에서 감축돼, 2014년 41.1%였던 수도권 사립대학 입학정원 비율은 2023년 43.6%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하지만 수도권-지방 간 격차는 지금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의 질제고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는 전체 대학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목표 없이 전국 평균값을 기준으로 대학을 평가하는 방안으로, 현행 법정 기준마저 무력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정기준만큼 전임교원을 확보하지 않아도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 A등급 대학이 될 수 있다.

한편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선정 평가에서도 적용됐던 등록금 부담완화 지수와 법인 지표(법인전입금 비율 및 법정부담금 부담률)는 2015년 평가지표에서 제외됐다. 그 결과 A등급을 획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립대학(13교) 가운데 법인이 부담해야 할 교직원 법정부담금을 100% 부담한 대학은 6교에 불과하다(2013년 결산기준). 수익용 기본재산을 법정 기준 만큼 확보하고 있는 대학(6교)도 마찬가지다. A등급 대학의 절반 이상이 법정 기준조차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도 최우수 대학으로 자리매김할 상황인 것이다. 이 같은 대학 평가로 교육의 질을 어떻게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교육부는 2023년까지 대학 및 전문대학의 입학정원을 총 16만 명 감축하겠다는 계획만 있을 뿐 이 과정에서 대학을 어떻게 지원·육성하여 고등교육의 질을 높일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전무하다. 단적으로, 정원 감축 결과 2023년이면 대학 당 평균 185억 원의 수입이 감소해, 지출 감소분을 고려하더라도 대학당 평균 85억 원(지출의 8.3% 수준)의 수입 부족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

교육부의 정원 감축 목표에 맞춰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려면, 2023년까지 보통(C)등급 대학이 매년 평균 5%의 입학정원을 감축(총 45%)해야 한다. 하위(D)등급은 매년 평균 6.7%(총 60%), 최하위(E)등급은 매년 평균 8.3%(총 75%)까지 정원을 감축해야 할 상황이다. 쉽게 말해 2023년까지 '보통' 대학이 현재 정원의 절반가량을, '최하위' 대학은 현재 정원의 4분의 3가량을 감축해야 한다는 얘기다. 학생등록금 이외의 수입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재정 현실에서 대부분 대학이 '교육의 질제고'는커녕 '생존'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다. 물론 정부 지원 확대와 더불어 불합리한 예산 편성, 무분별한 자산적 지출과 적립금 축적 등 사립대학 재정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간다면 우리나라 사립대학을 개혁할 수 있는 전환기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개혁은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가능한 것이지 저절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처럼 정부가 강제적 평가와 정원 감축만을 밀어붙인다면 대부분 대학이 지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 감소를 위해 교.직원을 동반 감축하거나 교육 투자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생존전략을 수립하기가 쉽다. 최근 대학들이 교수 및 직원의 대부분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인건비 절감에 나서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정부가 말하는 ‘대학 구조개혁’이란 지향점도 없이 소모적 갈등 양산으로 표류하다 대다수 대학이 교육의 질적 발전에 역행하는 모습으로 전략할 가능성이 크다. 대학의 정원 감축이 ‘교육의 질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과 사립대학 개혁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기계적 형평성 논리에 얽매어 지금도 매우 낮은 비중에 머물러 있는 국.공립대학을 무리하게 감축하는 것은 고등교육의 공공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어 재고가 필요하다. 이것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진정한 ‘대학 구조개혁’은 요원한 일이다.

2. 대학구조개혁 현장사례 - 응지세무대학을 중심으로

응지세무대학은 2004년 경기도 파주시에 공인회계사·세무사 등의 회계·세무 관련 자격증 취득과 세무직 공무원시험의 합격을 목표로 설립된 입학정원 599명의 3년제 전문대학이다. 한국에서 학원에 가지 않고 대학교육만으로 공인회계사·세무사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대학이며 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을 보유한 교수 20여 명이 재직하고 있다. 2016년 제50회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는 31명의 합격자, 제53회 세무사 시험에서 124명 합격자를 배출했다. 전문대학이라고 하기에 외부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응지세무대학은 2015년 대학구조조정 평가에서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전문대학에서 내는 성과로는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부실대학이라는 학점을 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현장에서 왜 발생하고 있을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대학평가지표의 기준에 있다. 첫 번째로 취업률을 산정하는 방식에 있다. 취업률은 경제상황을 대변하는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로 이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대학의 경제상황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분야에서는 취업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취업률 산정에서 제외하지만, 대학평가지표에서의 취업률은 졸업생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취업할 의사가 없는 학생도 취업률 산정에 포함이 된다.

<자료 1> 취업률에 대한 계산기준의 차이

- 경제분야에서의 취업률 : $\frac{\text{취업자}}{\text{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
- 대학평가지 취업률 : $\frac{\text{취업자}}{\text{졸업생}}$

이러한 산정방법에 의할 경우 응지세무대학교처럼 취업이 아닌 자격증이나 공무원시험 합격을 목표로 하는 대학은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낮아지게 된다. 평가점수에 있어서 다른 대학에 비해 떨어지는 점수를 받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NCS(국가직무능력표준)이다. 교육부는 NCS를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NCS는 직무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의 내용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회계·세법 분야의 NCS는 상업계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를 대학교육에 적

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적용하더라도 한 학기 정도의 분량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학평가 시 NCS를 적용했느냐의 여부는 을지세무대학과 같은 전문대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로 교육비환원율이다. 교육비환원율은 [학생 1인당 교육비지출액/학생 1인당 등록금 수입]으로 산정한다. 하지만 교육비를 정부지원을 받아 지출하는 경우 정부지원금이 분자의 '학생 1인당 교육비지출액'에만 포함이 되며, 분모의 '학생 1인당 등록금 수입'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산정방법은 정부지원금을 받는 대학의 교육비환원율과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학의 교육비환원율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현재 을지세무대학은 몇 가지 대안을 내놓고 있다. 첫 번째 문제인 취업률은 졸업생 기준이 아닌 취업할 의사가 있는 학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과 대학의 설립목적 등을 고려하여 취업률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인 NCS의 경우, 대학평가 시 NCS를 적용했느냐의 여부 보다는 대학의 교과과정이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지식·경험 등을 쌓을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기준을 만들거나 교과과정대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세 번째 교육비 환원율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을 받아 교육비로 지출한 경우 분자의 교육비 지출액에서 동액을 차감하는 방안과 교육비환원율을 상대평가지표가 아닌 절대평가지표로 바꾸어 100%를 초과하는 경우 모두 동일한 점수를 주는 방법으로 조정할 것을 주장한다.


V

Part

별첨자료

<별첨 1> 교육부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발표] 보도자료

★ 1월 29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보도자료
	교육부 홍보담당관실 ☎ 044-203-6588

[자료문의] 대학정책과장 김재금, 서기관 김혜림, 사무관 엄진섭 ☎ 044-203-6918

대학학사평가과장 김현주, 사무관 하진혜 ☎ 044-203-6806

사립대학제도과장 정영준, 사무관 홍수영 ☎ 044-203-6933

전문대학정책과장 조봉래, 사무관 정재선 ☎ 044-203-6400

대학재정지원과장 김천홍, 사무관 이지선 ☎ 044-203-6612

대학 교육의 질 제고 및 학령인구 급감 대비를 위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발표

'23학년도까지 3주기로 나눠 대학 정원 16만명 감축
모든 대학 대상 5등급으로 절대평가, 등급별 차등적 정원감축 등
구조개혁 추진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정원감축 등을 추진하는 내용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 창의와 융합을 근간으로 하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갖춘 인재 양성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의 질 제고를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 그간의 대학 평가는 취업률·충원률 등 정량지표 위주의 상대평가로 인하여 대학교육의 질 관리 측면에서는 미흡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아울러, 학령인구의 감소로 앞으로 10년 동안 대학 입학자원이 급격히 줄어들어 **2023학년도에는** 현재의 입학정원보다 **16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를 방지하는 경우, 대학의 질적 수준과 관계없이 지방대학·전문대학 중 상당수가 존립이 어려워지고, 나아가 지역간 균형발전 및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에도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우려된다.

※ 고교졸업생 수 전망(명) : 63.1만('13) → 54.9만('18) → 39.7만('23) → 40.9만('25)

□ 이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의 양적 규모는 대폭 줄이면서, 교육의 질은 높여 대학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 동 계획은 권역별 토론회, 대학 그룹별* 협의회, 총장 간담회, 산업·경제계 의견 청취, 관련 부처 협의 및 국가정책조정회의('14.1.23), 대학 구조개혁위원회('14.1.27) 등 **40회 이상의 의견수렴과 정책연구**를 거쳐 마련되었다.

* 수도권/지방, 대학/전문대, 국·공립/사립,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등

□ 구조개혁 계획은 전체 대학대상 정원감축, 새로운 대학 평가체제 도입, 구조개혁의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등을 담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평가결과에 따른 정원감축 실시

□ 대학 입학자원 규모 변화를 고려하여 '17학년도까지 4만명, '23학년도까지 총 16만명의 입학정원을 감축한다.

- 이를 위해 '22년까지를 3주기로 나누어 주기마다 모든 대학을 평가하고, 평가등급에 따라 최우수 대학을 제외한 모든 등급에 대해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주기별 정원감축 목표(안)〉

평가주기	1주기('14~'16)	2주기('17~'19)	3주기('20~'22)
감축 목표량	4만명	5만명	7만명
감축 시기	'15~'17학년도	'18~'20학년도	'21~'23학년도

- 대학과 전문대는 설립 목적과 평가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1주기 정원 감축 시에는 현재의 정원 비율(63:37)을 고려하여 대학과 전문대 간 정원감축 규모를 구분(대학 25,300명, 전문대 14,700명)하며
 - 교육대학 및 교원대는 별도의 평가를 통해 정원조정을 실시한다.
- 금년부터 모든 정부재정지원사업 평가에 구조개혁 계획(실적)을 반영함으로써 자율적 정원감축도 병행한다.
- '14년부터 각종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감축한 정원은 추후 구조개혁을 위한 평가에 따른 정원감축 시 모두 인정하여, 평가 주기 내 연도별로 정원감축이 분산되도록 유도·조정할 계획이다.
 - 구체적인 구조개혁 연계 방법은 사업별 추진계획에서 제시되며, 금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특성화사업의 추진계획은 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 * 예산 규모 : 수도권 대학 특성화사업 546억원,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2,031억원,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2,696억원

2. 대학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새로운 대학평가체제 도입

- 대학 특성화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새로운 대학 구조개혁 평가체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 종전에는 정량지표 위주의 상대평가 방식에 따라 하위대학에 대해서만 재정지원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 새로운 구조개혁 평가는 정량지표 외에 정성지표를 도입하고 절대평가로 전환된다.
 - 또한 모든 대학을 평가결과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입학정원 감축,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제한, 국가장학금 미지급, 학자금대출제한, 지속적 퇴출 유도 등 차등적인 구조개혁 조치가 취해지며, 2회 연속으로 매우미흡 등급을 받는 대학은 퇴출되게 된다.

〈5개 등급별 구조개혁 조치〉

등 급	구조개혁 조치
최우수	정원 자율 감축,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우수	정원 일부 감축,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보통	정원 평균 수준 감축,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미흡	정원 평균 이상 감축,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국가장학금 II유형 미지급, 학자금 대출 일부 제한
매우미흡	정원 대폭 감축,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국가장학금 I·II유형 미지급, 학자금 대출 전면 제한, 자발적 퇴출 유도

- ※ 국가장학금 I 유형 : 소득연계 차등지원
- 국가장학금 II 유형 : 대학자체노력(등록금 인하, 장학금 확충) 연계지원

- 평가영역 및 내용은 대학 운영과 교육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 평가지표 및 지표별 반영비율 등은 향후 국내·외 대학 평가지표 분석, 의견수렴 등을 거쳐 초안을 마련하고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 공통지표 및 특성화지표로 구분하되, 대학과 전문대학의 평가지표는 별도로 설정하여 평가하게 된다.

※ 평가지표 예시

(공통지표) 대학 발전계획, 학사운영, 창업, 교직원, 학생 선발 및 지원, 교육 시설, 대학(법인) 운영, 지역사회 연계 등사회공헌, 교육성과 등의 영역별로 구성

(특성화지표) 교육, 연구, 사회봉사, 평생교육, 산학협력, 국제화 등 각 대학이 가진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한 특성화 성과 및 계획

3. 지속적 구조개혁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 향후 구조개혁 정책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중심으로 추진하게 된다.
 - 교육부는 구조개혁 계획 수립 및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등 구조개혁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구조개혁 계획, 평가 계획, 평가지표 및 평가등급, 후속조치 등에 대해 심의하게 된다.
 - 아울러 교육부는 비상설 평가단 운영 등 평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무조직 운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교육부는 지속적·안정적인 구조개혁 추진을 위해 (가칭)「대학 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대학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에 따른 정원감축 등 구조개혁 조치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 동 법률의 주요 내용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설치, 정원감축에 따른 재산 및 회계 특례*, 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 특례, 평생교육기관으로의 전환 등 자발적 퇴출경로 등이다.



* 정원감축에 따른 기준 초과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허용 등

- 또한, 구조개혁 추진과 함께 대학의 신설을 억제하고, 재정이 열악한 영세 사학의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 설립 심사 시 국가 교육정책과 학령 인구 감소 등을 고려하고, 수익용 기본재산 최소 확보기준을 일반 대학의 경우 현재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등 인가요건을 강화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하였다.

※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 추진

- 한편, 그동안 대학 구조개혁 평가의 일환으로 시행해왔던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는 금년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추후 본격적인 대학 평가 시행 여부를 감안하여 실시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 교육부는 금년 상반기에 동 법률을 제정하고 1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 서남수 장관은 이번 구조개혁 계획 추진을 통해 대학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지방대·전문대가 상생 발전하는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 대학 구조개혁은 대학이 우리나라 교육·경제·문화에 차지하는 역할을 감안할 때 교육부만의 일이 아닌 범 정부차원에서 함께 나서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며 특히 구조개혁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범사회적인 협력과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붙임】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p>공공누리</p>	 <p>출처표시 상업용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p>	<p>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대학정책과 김혜림 서기관(☎ 044-203-6918), 엄진섭 사무관(☎ 044-203-6926), 대학학사평가과 하진혜 사무관(☎ 044-203-6806), 사립대학제도과 홍수영 사무관(☎ 044-203-6933), 전문대학정책과 정재선 사무관(☎ 044-203-6400), 대학재정지원과 이지선 사무관(☎ 044-203-661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p>
---	--	---



- 대학 교육의 질 제고 및 학령인구 급감 대비를 위한 -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2014. 1. 28.

교 육 부
(대학지원실)

목 차

I. 추진 배경	55
II. 추진 경과	57
III. 추진 계획	59
1. 평가결과에 따른 정원감축 실시	59
2. 대학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새로운 대학평가체제 도입	62
3. 지속적 구조개혁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65
IV. 추진 일정	67
〈붙임〉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 체계도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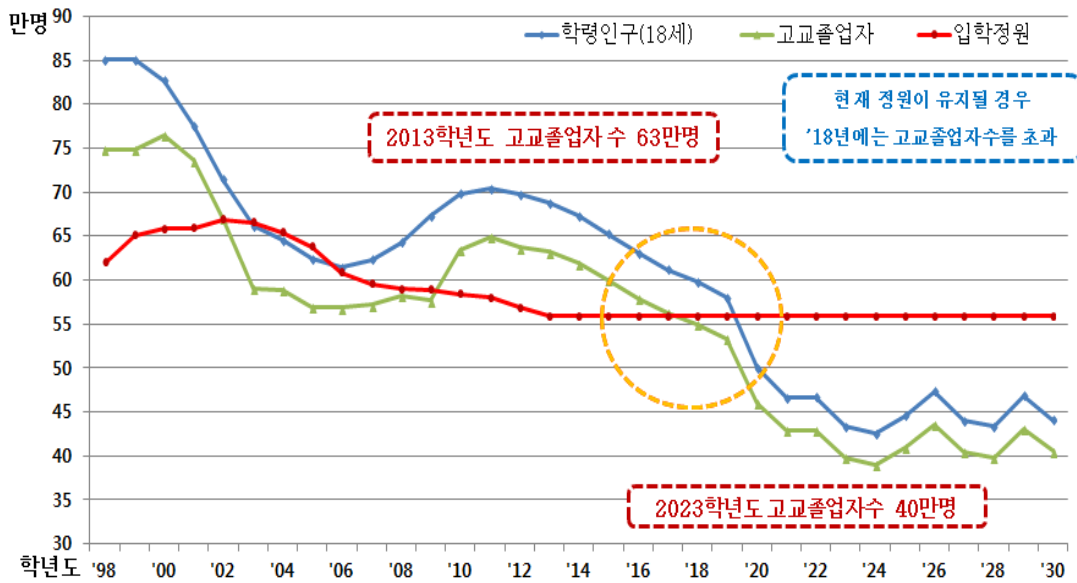
I. 추진 배경

□ 향후 고등교육 수급 전망에 따른 선제적 대응 필요

○ 대학 입학자원이 급감하고, 대학들의 미충원 확산이 가시화

- '18년부터 대입정원과 고교졸업자 수의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20년 이후 초과 정원이 급격히 증가

〈대학 입학자원 규모 전망 및 입학정원 변화 추이〉



□ 대학 교육의 질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 요구 증가

○ 반값 등록금 도입 등으로 국민 혈세가 부실대학 연명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사회적 요구 대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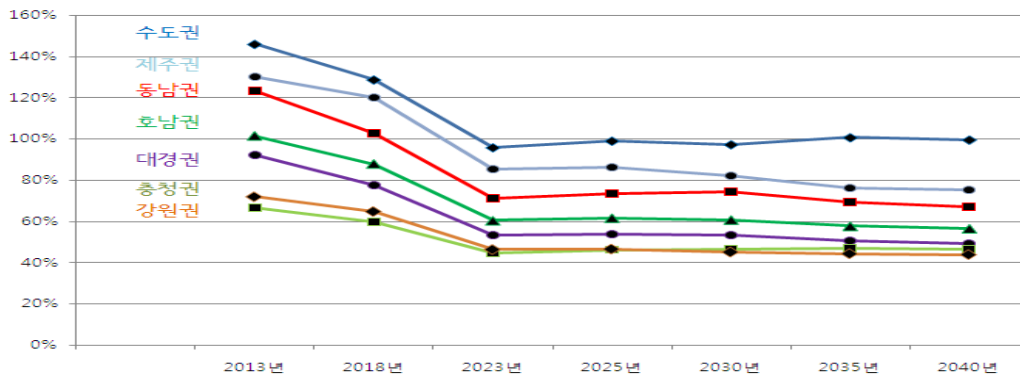
-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의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대학 전반의 교육수준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각종 대학 평가가 있으나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질 관리체제는 부재

□ 고등교육 생태계 황폐화 우려

- 대입 자원 급감으로 인해 교육의 질과 관계없이 지방대학·전문대학부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
 - 일자리 창출, 산업인력 양성·공급, 지역 문화 형성 등 지역에서의 대학 역할을 고려할 때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역의 위기”로 직결
- * '13학년도 미충원 인원의 96.0%가 지방대, 그 중 지방 전문대학이 51.5% 차지
- 지방대학·전문대학의 위기는 연쇄적으로 수도권 대학의 대학원 교육 위기로 이어져 고등교육 생태계 황폐화 초래 우려

〈2013년 이후 대학 소재지역별 충원율 전망〉



* 출처 : 배상훈 외(2012), 미래 고등교육 수요 변화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 유학생·평생학습 등 새로운 고등교육 수요 확대의 한계

- 외국인 유학생, 성인학습자 등의 유입으로는 단기간 내에 급격하게 발생할 학령인구 감소를 보완하기 곤란
 - 지난 10년간 전문대학의 성인학습자 비율은 늘었으나('99, 9.1% → '08, 16.1%), 4년제 대학은 12~13% 내외에서 정체
- ※ '13년 국내 외국인 유학생(85,923명)은 전체 대학·전문대학 재학생의 4.2% 수준

☞ 양적 규모는 대폭 줄어 교육의 질은 높여 대학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학 구조개혁 방안 추진 필요

II. 추진 경과

◇ 구조개혁의 필요성과 추진 방안에 대해 대학뿐만 아니라 범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광범위한 의견수렴 추진('13.9~12)

- 대학 현장 뿐만 아니라 산업·경제계, 관련부처 등 다양한 의견수렴

- 박근혜정부 고등교육 기본정책 방향인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 수립('13.10.1) 시, 대학 구조개혁과 평가체제에 대한 기본 방향 설정
 - * '창의적 인재 양성과 혁신적 가치창출을 통한 국민행복시대 구현'을 비전으로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과제로 “대학 평가체제 개선과 지속적 구조개혁” 과제 설정
- 대학 구조개혁 추진 방안 정책연구 추진('13.9~, 책임자: 성균관대 배상훈 교수)
- 정책연구팀·교육부 공동 대학 관계자 의견 수렴
 - 지방대·수도권대, 전문대, 재정지원제한대학, 국립대 등으로 구분하여 의견 수렴('13.9~10, 15회)
- 대교협·전문대협·교육부 공동 구조개혁 방안 권역별 토론회 개최(3회, '13.10.17 서울, 11.5 부산, 11.8 광주)
- 대학구조개혁위원회, 권역별 대학총장 간담회 개최('13.11, 3회)
- 교육부장관, 권역별 대학총장 간담회 개최('13.11, 5회)
-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고등교육분과) 개최('13.12.18)
- 구조개혁 방안에 대한 산업·경제계 의견수렴('13.12,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경영자총협회, 청년기업가정신재단, KDI 등)
- 교육부장관, 여당 대표최고위원, 당대표, 사무총장 등 대상 구조개혁 관련 특강('13.12.17)
 - * 국회 지속가능발전연구회(회장 신학용 의원) 및 교문위 야당의원 주최 구조개혁 토론회 2회 개최
- 관련부처 협의('13.12,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 국가정책조정회의('14.1.23),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14.1.27)

<구조개혁 방안에 대한 주요 의견>

□ 정부 주도의 구조개혁 필요성

- 수도권과 지방이 공동 발전하는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과 부실 교육 으로부터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 개입 필요
- 과거 경영계는 시장에 맡기는 정책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개진하였으나, 실질적인 구조개혁 성과가 미흡하여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
- 대학 구조개혁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 의견수렴 필요

□ 정원감축 방법 및 관련제도 개선

- 대학 구조개혁은 학교 수와 입학정원 감축을 병행할 필요가 있고, 수도권/지방, 일반대/전문대학으로 구분하여 접근 필요
- 학생 납입금이 사립대 주 재원으로 정원감축은 사립대 재정 기반을 더욱 취약하게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대학 평가체제 개선

-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대학 교육의 질과 전반적인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평가기구 설립 필요
- 정량 평가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서는 양적 지표에 질적 요소를 반영하여 단기간에 지표 향상이 어렵도록 설계

□ 사학의 퇴출경로 마련 등

- 정부에 의한 부실대학 퇴출은 반발과 부작용을 초래, 잔여재산 처리 등 대학 스스로 퇴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정원 감축 및 퇴출 시, 명예퇴직 제도 도입, 구조조정 기금 또는 잔여재산을 재원으로 한 퇴직수당 지급 등 검토 필요
- 정원감축으로 발생하는 유휴시설에 대해 임대업 등 영리행위 허용

Ⅲ. 추진 계획

기본 방향

- ①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 대상 정원감축 실시
- ② 대학 특성화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새로운 대학평가체제 도입
- ③ 지속적·체계적 구조개혁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1. 평가결과에 따른 정원감축 실시

① 주기별 평가 및 정원감축

- (감축 규모) '14년 이후 대학 입학자원 규모* 및 '25년 이후 학령인구 증가 등을 고려하여 '23학년도까지 16만명 감축

- 입학자원 감소 추이를 고려하여 '17학년도까지는 4만명 감축

* 미충원 예상규모(천명) : 38.3('17) → 88.2('20) → 160.8('23) → 162.9('26)

- (감축 방안) 구조개혁 기간('14~'22)을 3주기로 나누어 주기마다 모든 대학을 평가하고 평가등급에 따라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대해 차등적으로 정원 감축

*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의 경우에는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자율 감축 유도

〈주기별 정원감축 목표(안)〉

평가주기	1주기('14~'16)	2주기('17~'19)	3주기('20~'22)
감축 목표량	4만명	5만명	7만명
감축 시기	'15~'17학년도	'18~'20학년도	'21~'23학년도

- 대학이 '14학년도 이후 정원을 선제적으로 감축할 경우에는 추후 구조개혁 평가에 따른 감축 시 모두 인정

※ '13학년도 이전에 대학 자율적으로 감축한 정원은 일부 인정 검토

- 대학이 중장기 산업별 인력수급전망 등을 활용하여 정원감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 (산업부·고용부 등 협업)
- (대학 구분) 대학과 전문대는 설립목적과 평가기준이 다르므로 우선 1주기('14~'16) 정원감축 시에는 현재의 정원 비율 수준 (63:37)에서 구분하여 정원 감축 실시(대학 25,300명, 전문대 14,700명)
- 교육대학 및 교원대는 별도의 평가를 통해 정원조정 실시

② 재정지원사업과 구조개혁 연계

- 모든 정부재정지원사업 평가에 구조개혁 계획(실적)을 반영하여 자율적 정원감축도 병행
- '14학년도부터 각종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감축한 정원은 추후 평가에 따른 정원감축 시 모두 인정
 - ※ 제출한 계획에 대해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미이행 시 강력한 제재 실시
- 평가 주기 내 연도별로 정원감축이 분산되도록 유도 및 조정
- 구체적인 구조개혁 연계 방법은 사업별 추진계획에서 제시

〈주요 재정지원사업 개요〉

사 업	예산(억원)	기간	지원규모	'14년 계획
지방 대학 특성화사업	2,031	'14~'18 (2+3)	70교 내외	선정평가
수도권 대학 특성화사업	546	'14~'18 (2+3)	30교 내외	선정평가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	573	'10~ (2+2)	25교('13)	연차·중간·종합평가 및 신규선정
LINC	2,388	'12~'17 (2+3)	51교('13) 57교('14)	중간평가 및 신규선정
BK21 플러스	2,973	'13~'20 (3+4)	74교, 550개 사업단·팀('13)	연차컨설팅 ※ '15년 중간평가(전면 재평가) 및 '16년 신규선정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2,696	'14~'18 (2+3)	78교 내외 (특성화 70교, 평생 8교)	선정평가

2. 대학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새로운 대학평가체제 도입

◇ 대학 특성화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대학 구조개혁 평가체제 마련

- 기존 정량지표 위주의 대학 평가에서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맞춤형 대학평가체제로 전면 개편

○ (평가 대상)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

-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대해 등급별로 차등적 정원 감축 등 구조개혁 조치

○ 등급별 구조개혁 조치

- 입학정원 감축,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국가장학금 미지급, 학자금 대출 제한, 자발적 퇴출 유도

- 2회 연속으로 '매우미흡' 등급을 받을 경우 퇴출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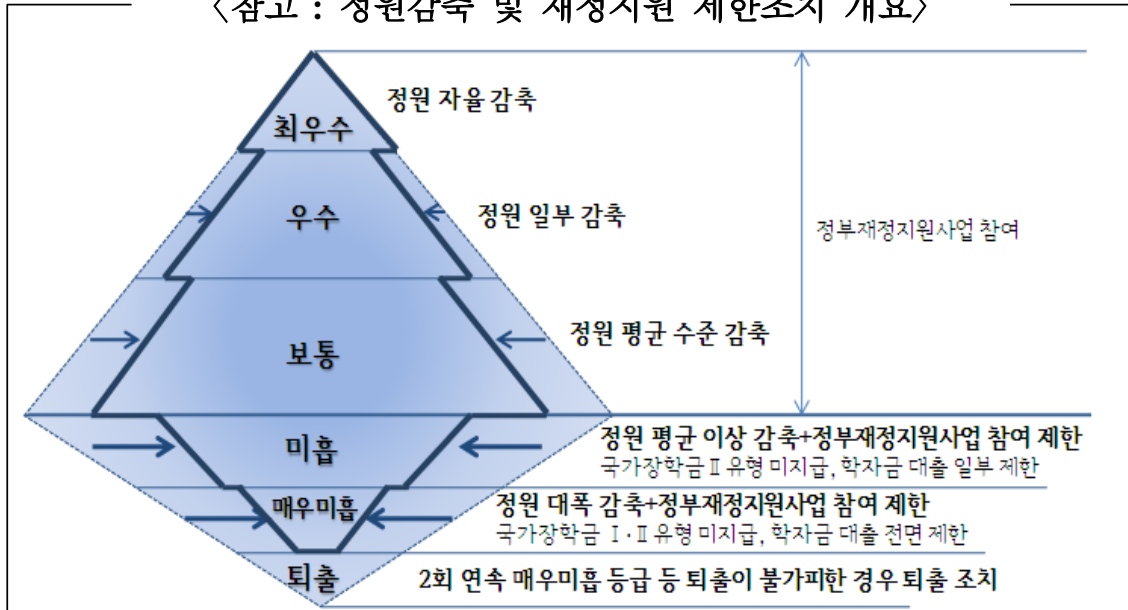
〈5개 등급별 구조개혁 조치〉

등 급	구조개혁 조치
최우수	정원 자율 감축 ,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우수	정원 일부 감축 ,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보통	정원 평균 수준 감축 ,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미흡	정원 평균 이상 감축 ,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국가장학금 II 유형 미지급, 학자금 대출 일부 제한
매우미흡	정원 대폭 감축 ,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국가장학금 I·II 유형 미지급, 학자금 대출 전면 제한, 자발적 퇴출 유도

※ 국가장학금 I 유형 : 소득연계 차등지원

국가장학금 II 유형 : 대학자체노력(등록금 인하, 장학금 확충) 연계지원

〈참고 : 정원감축 및 재정지원 제한조치 개요〉



○ (평가 추진 일정) 평가주기 설정 및 주기별 평가 실시

- 구조개혁 추진 기간('14~'22)을 3주기(1주기 3년)*로 나누고 각 주기 내 모든 대학을 평가

* 1주기('14~'16) , 2주기('17~'19), 3주기('20~'22)

- '14년 상반기에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구조개혁 평가 실시

○ (평가방식)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 대학운영 전반과 교육 과정에 이르는 모든 영역을 평가하여 교육의 질 제고

- (기본원칙) 평가지표, 지표별 반영비율 등*은 사회 각계의 인사가 참여하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 국내·외 대학평가 지표분석, 의견수렴 등 정책연구를 거쳐 개발

- (평가지표) 공통지표 및 특성화지표로 구성하되, 대학/전문대 평가 지표는 별도 설정, 국·공립/사립대 평가지표는 동일하게 적용

※ 국·공립/사립대에 동시에 적용할 수 없는 지표는 각각 적합한 지표로 설정함으로써 구조적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

〈 평가영역 및 내용 (예시) 〉

평가영역	평가 내용
대학 발전계획	대학의 사명 및 교육목표, 중장기 대학발전계획 등
학사운영	교육과정(교양 및 전공교과, 교육목표와의 연계, 산업계 및 지역사회 요구반영, 교수-학생 상호작용 등) 편성·운영, 강의평가 제도 운영 및 활용, 학점 및 학위 등 학사관리, 교수학습 지원체제, 취업 및 창업 지원 체제 등
교직원	교원 임용, 전임교원 등 우수교원 확보 체제, 직원 인사제도, 교수업적평가제도 운영 등
학생 선발 및 지원	학생 선발체제, 장학금, 등록금, 학생 상담체제 등
교육시설	강의실, 실험·실습실, 학생 복지시설, 도서관, 기숙사, 체육장 등
대학(법인) 운영	이사회 및 각종위원회 운영, 재정운영, 학내갈등관리 등
사회공헌	초·중등학교, 산업체 등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 등
교육성과	취업, 교육만족도 등
대학 특성화	교육, 연구, 사회봉사, 평생교육, 산학협력, 국제화 등 각 대학이 가진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한 특성화 성과 및 계획

3. 지속적 구조개혁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①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추진 체제 구축

- (교육부) 구조개혁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등 구조개혁 정책 총괄
- (대학구조개혁위원회) 구조개혁 정책에 관한 사항(구조개혁 기본계획, 평가계획, 평가지표, 평가등급, 구조개혁 조치 등) 심의
 - ※ (위원 구성) 교육계, 대교협·전문대교협, 산업계, 법조계, 언론계, 지역발전위원회 등에서 추천한 인사(20명 이내)를 교육부장관이 위촉
- 비상설 평가단 운영 등 평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무조직 운영 검토
- 비상설 평가단 : 대학별 자체평가보고서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수행
 - ※ 평가단은 전·현직 교수, 산업계 인사 등을 포함하여 약 400~500명 규모로 구성
- (대학협의체) 구조개혁을 위한 자체노력 및 구조개혁 추진 협조

② [가칭] 「대학 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

- 법률 제정의 필요성
 - 대학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 결과에 따른 정원감축 등 구조개혁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사립대학에 대한 원활한 구조개혁을 위해 자발적인 퇴출경로 마련
- 법률안 주요 내용
 - 목적, 대학 평가·구조개혁 등 용어의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 대학구조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
 - 대학 평가의 기본원칙, 평가 업무 위탁, 평가 비용 보조,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평가 관련자의 기밀 준수 의무 등
 - 평가 등급별 정원감축, 정부 재정지원 제한, 국가장학금 지급 제한 등 구조개혁 조치, 강제 퇴출, 구조개혁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 인수합병, 정원감축에 따른 재산 및 회계 특례*, 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 특례, 평생교육기관으로의 전환 등 자발적 퇴출경로 마련, 통·폐합 및 해산 대학 재학생의 보호에 관한 사항 등
- * 정원감축에 따른 기준 초과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허용 등

IV. 추진 일정

- 대학 구조개혁 및 평가 관련 법률 초안 마련 : ~'14.2월
- 대학 구조개혁 및 평가 관련 입법 추진 : '14.2월~
- 1주기 대학 평가 계획 마련 등 평가 착수 : '14년 상반기~

<대학평가 일정('14년)>

구분	'14상	'14하	'15상	'15하	'16상
법령제정	'14.6				
평가계획 및 평가편람(안) 마련	'14.5				
대학구조개혁위원 회 평가편람 확정		'14.8			
대학별 보고서 작성		'14.10			
서면·현장평가			'14.11~		

※ 이의신청 및 조정, 평가등급 확정('15년 하반기), 전체대학 정원감축 계획 발표('15년 하반기), 대학별 정원감축 계획 마련 및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발표('16년 상반기)

<p>비전</p>	<p>창의적 인재양성과 혁신적 가치창출을 통한 국민행복시대 구현</p>			
<p>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중심의 잘 가르치는 대학 육성 ▶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연구역량 강화 ▶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열린 대학 조성 ▶ 고른 기회와 평생학습을 보장하는 대학 정착 			
<p>정책 과제</p>	<p>경쟁력 강화 기반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평가체제 개선과 지속적 구조개혁 ▶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재정 지원의 효율성 제고 ▶ 기회균등 실현을 위한 맞춤형 학자금 지원제도 정착 		
	<p>산학협력과 평생학습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협력 활성화 및 직업교육 강화 ▶ 직업교육-전문대-중소기업 연계 고리의 활성화 ▶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평생학습체제 구축 		
	<p>연구역량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연구중심대학 육성 ▶ 지식강국을 구현할 학술 지원체제 구축 ▶ 대학원 체제 개선을 위한 대학원 질 관리 		
	<p>대학교육 혁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격한 학사관리와 교육과정 혁신 ▶ 세계시민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 국제화 추진 ▶ 지역발전의 중핵 역할을 담당하는 대학 육성 		
<p>전략</p>	<p>자율과 책무</p>	<p>특성화</p>	<p>글로벌화</p>	<p>소통과 협업</p>

<별첨 3> 2013년 정원대비 2016년 전국 4년제 대학 입학정원 현황

학교명	설립유형	구분	지역	입학정원				입학정원 감축량(A-B)
				2013(A)	2014	2015	2016(B)	
예원예술대학교	사립	본교	전북	249	249	324	324	-75
이화여자대학교	사립	본교	서울	2,989	2,989	3,027	3,027	-38
광신대학교	사립	본교	광주	130	142	142	142	-12
연세대학교	사립	본교	서울	3,408	3,408	3,417	3,417	-9
고려대학교	사립	본교	서울	3,793	3,793	3,799	3,799	-6
서울대학교	국립대 법인	본교	서울	3,124	3,124	3,130	3,130	-6
감리교신학대학교	사립	본교	서울	200	200	200	200	0
건국대학교	사립	본교	서울	3,000	3,000	3,000	3,000	0
건국대학교(글로벌)	사립	분교	충북	1,760	1,760	1,760	1,760	0
고려대학교(세종)	사립	분교	충남	1,465	1,465	1,465	1,465	0
광주가톨릭대학교	사립	본교	전남	40	40	40	40	0
대구예술대학교	사립	본교	경북	463	463	463	463	0
대구외국어대학교	사립	본교	경북	130	130	130	130	0
대신대학교	사립	본교	경북	125	125	125	125	0
대전가톨릭대학교	사립	본교	충남	40	40	40	40	0
대전신학대학교	사립	본교	대전	60	60	60	60	0
덕성여자대학교	사립	본교	서울	1,210	1,210	1,210	1,210	0
동국대학교	사립	본교	서울	2,685	2,685	2,685	2,685	0
루터대학교	사립	본교	경기	100	100	100	100	0
목포가톨릭대학교	사립	본교	전남	130	130	130	130	0
부산장신대학교	사립	본교	경남	70	70	70	70	0
서경대학교	사립	본교	서울	1,410	1,410	1,410	1,410	0
서울기독교대학교	사립	본교	서울	161	161	161	161	0
서울신학대학교	사립	본교	경기	540	540	540	540	0
서울장신대학교	사립	본교	경기	122	122	122	122	0
성결대학교	사립	본교	경기	1,280	1,280	1,280	1,280	0
세종대학교	사립	본교	서울	2,320	2,320	2,320	2,320	0
송원대학교	사립	본교	광주	800	800	800	800	0
수원가톨릭대학교	사립	본교	경기	90	90	90	90	0
숙명여자대학교	사립	본교	서울	2,198	2,198	2,198	2,198	0
송실대학교	사립	본교	서울	2,675	2,675	2,675	2,675	0
안양대학교	사립	본교	경기	1,257	1,257	1,257	1,257	0
영동(유원)대학교	사립	본교	충북	1,080	1,080	1,080	1,080	0
영산선학대학교	사립	본교	전남	50	50	50	50	0

예수대학교	사립	본교	전북	134	134	134	134	0
용인대학교	사립	본교	경기	950	950	950	950	0
을지대학교	사립	본교	대전	1,144	1,144	1,144	1,144	0
장로회신학대학교	사립	본교	서울	150	150	150	150	0
제주국제대학교	사립	본교	제주	800	800	800	800	0
중앙승가대학교	사립	본교	경기	120	120	120	120	0
차의과학대학교	사립	본교	경기	510	510	510	510	0
청운대학교	사립	본교	충남	1,420	1,420	1,420	1,420	0
총신대학교	사립	본교	서울	360	360	360	360	0
추계예술대학교	사립	본교	서울	290	290	290	290	0
포항공과대학교	사립	본교	경북	320	320	320	320	0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사립	본교	경기	1,380	1,380	1,380	1,380	0
한국성서대학교	사립	본교	서울	240	240	240	240	0
한국체육대학교	국립	본교	서울	590	590	590	590	0
한세대학교	사립	본교	경기	590	590	590	590	0
한영신학대학교	사립	본교	서울	200	200	200	200	0
홍익대학교	사립	본교	서울	2,470	2,470	2,470	2,470	0
칼빈대학교	사립	본교	경기	104	98	98	98	6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사립	본교	경기	200	200	190	190	10
호남신학대학교	사립	본교	광주	170	170	170	160	10
가톨릭대학교	사립	본교	경기	1,718	1,718	1,730	1,707	11
꽃동네대학교	사립	본교	충북	120	120	120	108	12
영남신학대학교	사립	본교	경북	140	125	125	125	15
위덕대학교	사립	본교	경북	870	870	860	855	15
초당대학교	사립	본교	전남	815	815	800	800	15
창신대학교	사립	본교	경남	530	530	520	512	18
금강대학교	사립	본교	충남	165	165	145	145	20
김천대학교	사립	본교	경북	992	972	972	972	20
인천가톨릭대학교	사립	본교	인천	200	180	180	180	20
케이씨(KC)대학교	사립	본교	서울	330	330	330	310	20
협성대학교	사립	본교	경기	1,080	1,080	1,060	1,060	20
한국외국어대학교	사립	본교	서울	3,398	3,377	3,377	3,377	21
경희대학교	사립	본교	서울	4,820	4,820	4,915	4,798	22
세한대학교	사립	본교	전남	1,100	1,100	1,075	1,075	25
한동대학교	사립	본교	경북	760	760	752	735	25
평택대학교	사립	본교	경기	950	950	937	924	26
성공회대학교	사립	본교	서울	540	540	513	513	27
한국항공대학교	사립	본교	경기	890	890	890	861	29
가야대학교	사립	본교	경남	665	665	635	635	30

신경대학교	사립	본교	경기	309	309	293	278	31
중원대학교	사립	본교	충북	1,077	1,044	1,044	1,044	33
한일장신대학교	사립	본교	전북	275	245	239	239	36
서강대학교	사립	본교	서울	1,640	1,640	1,640	1,600	40
침례신학대학교	사립	본교	대전	400	400	400	360	40
한경대학교	국립	본교	경기	1,253	1,253	1,253	1,212	41
광운대학교	사립	본교	서울	1,755	1,755	1,755	1,712	43
삼육대학교	사립	본교	서울	1,212	1,212	1,207	1,167	45
한양대학교(ERICA)	사립	본교	경기	1,900	1,900	1,880	1,853	47
홍익대학교(세종)	사립	본교	충남	1,444	1,444	1,444	1,397	47
부산가톨릭대학교	사립	본교	부산	965	965	916	916	49
연세대학교(원주)	사립	본교	강원	1,528	1,528	1,528	1,478	50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사립	본교	충남	900	900	900	846	54
서울시립대학교	공립	본교	서울	1,768	1,768	1,768	1,711	57
목포해양대학교	국립	본교	전남	226	211	166	166	60
한국해양대학교	국립	본교	부산	1,033	1,018	973	973	60
아주대학교	사립	본교	경기	1,938	1,938	1,940	1,876	62
한밭대학교	국립	본교	대전	1,923	1,923	1,923	1,861	62
경동대학교	사립	본교	강원	1,848	1,823	1,785	1,785	63
한양대학교	사립	본교	서울	2,915	2,915	2,921	2,850	65
대진대학교	사립	본교	경기	1,950	1,930	1,910	1,883	67
한신대학교	사립	본교	경기	1,260	1,260	1,190	1,190	70
고신대학교	사립	본교	부산	960	940	886	886	74
극동대학교	사립	본교	충북	1,100	1,045	1,024	1,024	76
한라대학교	사립	본교	강원	995	995	995	915	80
동양대학교	사립	본교	경북	1,141	1,141	1,060	1,060	81
상명대학교	사립	본교	서울	1,400	1,400	1,344	1,316	84
인하대학교	사립	본교	인천	3,529	3,529	3,554	3,440	89
울산대학교	사립	본교	울산	2,846	2,846	2,838	2,754	92
상지대학교	사립	본교	강원	1,986	1,986	1,892	1,892	94
국민대학교	사립	본교	서울	2,983	2,983	2,983	2,887	96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국립	본교	경남	1,339	1,334	1,334	1,242	97
신한대학교	사립	본교	경기	2,962	1,453	1,453	1,453	1,509
서남대학교	사립	본교	전북	1,857	1,806	949	900	957
경주대학교	사립	본교	경북	1,385	1,059	762	762	623
수원대학교	사립	본교	경기	2,612	2,612	2,404	2,196	416
동아대학교	사립	본교	부산	4,549	4,549	4,149	4,148	401
강원대학교	국립	본교	강원	4,986	4,986	4,986	4,586	400
조선대학교	사립	본교	광주	4,755	4,745	4,361	4,361	394

대구대학교	사립	본교	경북	4,533	4,533	4,351	4,149	384
동의대학교	사립	본교	부산	3,950	3,905	3,595	3,595	355
전남대학교	국립	본교	광주	4,316	4,316	4,322	3,977	339
영남대학교	사립	본교	경북	4,912	4,912	4,702	4,602	310
계명대학교	사립	본교	대구	4,970	4,970	4,820	4,675	295
신라대학교	사립	본교	부산	2,430	2,305	2,210	2,143	287
호남대학교	사립	본교	광주	1,842	1,828	1,562	1,562	280
한남대학교	사립	본교	대전	2,995	2,975	2,855	2,735	260
전북대학교	국립	본교	전북	4,124	4,124	4,161	3,867	257
경성대학교	사립	본교	부산	3,055	3,050	2,870	2,800	255
한국국제대학교	사립	본교	경남	1,118	1,118	932	864	254
충남대학교	국립	본교	대전	3,750	3,750	3,652	3,500	250
백석대학교	사립	본교	충남	3,100	3,100	2,852	2,852	248
공주대학교	국립	본교	충남	3,034	3,034	3,034	2,787	247
단국대학교	사립	본교	경기	4,941	4,865	4,815	4,695	246
충북대학교	국립	본교	충북	3,045	3,045	3,017	2,800	245
목원대학교	사립	본교	대전	2,153	2,078	2,000	1,910	243
명지대학교	사립	본교	서울	2,898	2,898	2,805	2,660	238
경남대학교	사립	본교	경남	3,210	3,160	3,000	2,975	235
중부대학교	사립	본교	충남	2,219	2,169	2,073	1,988	231
부산외국어대학교	사립	본교	부산	2,120	2,075	1,975	1,890	230
배재대학교	사립	본교	대전	2,320	2,278	2,173	2,093	227
전주대학교	사립	본교	전북	2,792	2,792	2,645	2,565	227
가톨릭관동대학교	사립	본교	강원	2,388	2,344	2,203	2,165	223
한서대학교	사립	본교	충남	1,850	1,850	1,628	1,628	222
세명대학교	사립	본교	충북	2,090	2,090	1,880	1,880	210
광주대학교	사립	본교	광주	1,850	1,827	1,644	1,644	206
대전대학교	사립	본교	대전	2,381	2,373	2,277	2,181	200
부경대학교	국립	본교	부산	3,520	3,520	3,470	3,320	200
호서대학교	사립	본교	충남	3,125	3,100	2,976	2,926	199
남서울대학교	사립	본교	충남	2,446	2,446	2,348	2,250	196
우석대학교	사립	본교	전북	1,910	1,910	1,715	1,715	195
경북대학교	국립	본교	대구	4,873	4,873	4,958	4,682	191
선문대학교	사립	본교	충남	2,289	2,282	2,164	2,098	191
부산대학교	국립	본교	부산	4,434	4,434	4,385	4,244	190
제주대학교	국립	본교	제주	2,324	2,324	2,324	2,134	190
경기대학교	사립	본교	경기	3,147	3,147	2,989	2,970	177
대구가톨릭대학교	사립	본교	경북	3,082	3,082	3,016	2,906	176
대구한의대학교	사립	본교	경북	1,694	1,693	1,523	1,518	176

청주대학교	사립	본교	충북	2,946	2,941	2,856	2,772	174
동국대학교(경주)	사립	본교	경북	1,900	1,900	1,805	1,729	171
한국교통대학교	국립	본교	충북	2,124	2,124	2,124	1,953	171
원광대학교	사립	본교	전북	3,696	3,676	3,601	3,526	170
강릉원주대학교	국립	본교	강원	2,037	2,037	1,972	1,873	164
동명대학교	사립	본교	부산	2,020	2,020	1,990	1,858	162
순천대학교	국립	본교	전남	1,786	1,768	1,768	1,624	162
한려대학교	사립	본교	전남	531	531	390	370	161
가천대학교	사립	본교	경기	3,954	3,904	3,924	3,796	158
성신여자대학교	사립	본교	서울	2,216	2,216	2,216	2,060	156
경일대학교	사립	본교	경북	1,770	1,760	1,670	1,615	155
군산대학교	국립	본교	전북	1,928	1,928	1,870	1,773	155
순천향대학교	사립	본교	충남	2,530	2,530	2,428	2,377	153
인천대학교	국립대 법인	본교	인천	2,680	2,680	2,680	2,529	151
동덕여자대학교	사립	본교	서울	1,657	1,657	1,574	1,507	150
동서대학교	사립	본교	부산	2,620	2,620	2,593	2,470	150
경상대학교	국립	본교	경남	3,222	3,222	3,222	3,077	145
목포대학교	국립	본교	전남	1,755	1,755	1,735	1,611	144
인제대학교	사립	본교	경남	2,358	2,358	2,330	2,214	144
중앙대학교	사립	본교	서울	4,498	4,498	4,503	4,355	143
동신대학교	사립	본교	전남	1,720	1,720	1,620	1,580	140
우송대학교	사립	본교	대전	2,173	2,160	2,076	2,033	140
한성대학교	사립	본교	서울	1,620	1,620	1,539	1,480	140
서울여자대학교	사립	본교	서울	1,730	1,730	1,643	1,592	138
영산대학교	사립	본교	경남	1,667	1,667	1,577	1,532	135
한림대학교	사립	본교	강원	1,840	1,840	1,840	1,711	129
강남대학교	사립	본교	경기	1,657	1,657	1,574	1,535	122
경운대학교	사립	본교	경북	1,331	1,322	1,210	1,210	121
건양대학교	사립	본교	충남	1,854	1,842	1,832	1,738	116
상명대학교(천안)	사립	본교	충남	1,450	1,450	1,392	1,334	116
광주여자대학교	사립	본교	광주	1,010	995	895	895	115
안동대학교	국립	본교	경북	1,588	1,588	1,568	1,476	112
호원대학교	사립	본교	전북	1,390	1,395	1,320	1,278	112
나사렛대학교	사립	본교	충남	1,349	1,349	1,292	1,238	111
성균관대학교	사립	본교	서울	3,442	3,442	3,444	3,331	111
금오공과대학교	국립	본교	경북	1,341	1,341	1,291	1,233	108
서울과학기술대	국립	본교	서울	2,240	2,240	2,204	2,132	108
창원대학교	국립	본교	경남	1,887	1,887	1,887	1,780	107

남부대학교	사립	본교	광주	809	789	705	705	104
한중대학교	사립	본교	강원	705	669	635	603	102
서원대학교	사립	본교	충북	1,747	1,747	1,697	1,647	100

<별첨 4> 2013년 정원대비 2016년 전국 전문대학 입학정원 현황

학교명	설립 유형	구분	지역	입학정원				입학정원 감축량 (A-B)
				2013(A)	2014	2015	2016(B)	
가톨릭상지대학교	사립	본교	경북	926	832	668	633	293
강동대학교	사립	본교	충북	2,086	2,086	1,856	1,827	259
강릉영동대학교	사립	본교	강원	1,234	1,234	1,204	1,109	125
강원관광대학교	사립	본교	강원	630	616	605	585	45
강원도립대학교	공립	본교	강원	500	480	455	455	45
거제대학교	사립	본교	경남	495	470	465	459	36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사립	본교	경기	1,600	1,580	1,580	1,502	98
경남도립거창대학	공립	본교	경남	500	500	480	465	35
경남도립남해대학	공립	본교	경남	440	440	420	410	30
경남정보대학교	사립	본교	부산	2,915	2,890	2,806	2,731	184
경민대학교	사립	본교	경기	1,800	1,754	1,714	1,674	126
경북대학교	사립	본교	경기	2,468	2,348	2,198	2,153	315
경북과학대학교	사립	본교	경북	1,020	840	840	840	180
경북도립대학교	공립	본교	경북	485	485	435	425	60
경북보건대학교	사립	본교	경북	422	422	392	392	30
경북전문대학교	사립	본교	인천	1,085	1,085	1,030	963	122
경인여자대학교	사립	본교	대구	1,848	1,848	1,761	1,705	143
계명문화대학교	사립	본교	경기	2,410	2,385	2,270	2,211	199
계원예술대학교	사립	본교	전남	1,208	1,208	1,160	1,160	48
고구려대학교	사립	본교	전남	1,022	962	977	962	60
광양보건대학교	사립	본교	광주	1,110	1,110	807	766	344
광주보건대학교	사립	본교	경북	1,320	1,300	1,204	1,140	180
구미대학교	사립	본교	경기	1,852	1,792	1,722	1,636	216
국제대학교	사립	본교	전북	2,160	2,160	2,140	2,120	40
군산간호대학교	사립	본교	전북	240	240	235	228	12
군장대학교	사립	본교	광주	1,050	939	819	800	250
기독교간호대학교	사립	본교	경북	120	120	120	113	7
김포대학교	사립	본교	경기	1,478	1,478	1,463	1,463	15
김해대학교	사립	본교	경남	650	780	592	527	123
농협대학교	사립	본교	경기	66	66	63	61	5
대경대학교	사립	본교	경북	1,878	1,840	1,783	1,756	122
대구공업대학교	사립	본교	대구	1,365	1,109	936	936	429
대구과학대학교	사립	본교	대구	1,824	1,734	1,664	1,586	238
대구미래대학교	사립	본교	경북	1,040	1,020	500	500	540

대구보건대학교	사립	본교	대구	2,518	2,398	2,352	2,277	241
대덕대학교	사립	본교	대전	2,104	2,104	1,984	1,984	120
대동대학교	사립	본교	부산	700	670	640	580	120
대림대학교	사립	본교	경기	2,271	2,271	2,230	2,142	129
대원대학교	사립	본교	충북	1,344	1,344	1,174	1,174	170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사립	본교	대전	1,929	1,929	1,874	1,814	115
대전보건대학교	사립	본교	대전	2,128	2,088	2,053	1,980	148
동강대학교	사립	본교	광주	1,625	1,460	1,385	1,355	270
동남보건대학교	사립	본교	경기	1,534	1,534	1,426	1,386	148
동부산대학교	사립	본교	부산	1,540	1,462	1,253	1,048	492
동서울대학교	사립	본교	경기	2,657	2,657	2,577	2,494	163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사립	본교	경기	885	885	885	841	44
동아보건대학교	사립	본교	전남	1,012	792	776	776	236
동양미래대학교	사립	본교	서울	2,297	2,297	2,227	2,135	162
동원과학기술대	사립	본교	경남	1,255	1,215	944	911	344
동원대학교	사립	본교	경기	1,740	1,740	1,700	1,654	86
동의과학대학교	사립	본교	부산	2,545	2,510	2,438	2,376	169
동주대학교	사립	본교	부산	1,600	1,500	1,435	1,385	215
두원공과대학교	사립	본교	경기	2,398	2,270	2,191	2,122	276
마산대학교	사립	본교	경남	2,466	2,300	2,225	2,186	280
명지전문대학	사립	본교	서울	2,812	2,812	2,785	2,785	27
목포과학대학교	사립	본교	전남	1,360	1,265	1,010	905	455
문경대학교	사립	본교	경북	382	361	315	315	67
배화여자대학교	사립	본교	서울	1,304	1,304	1,304	1,304	0
백석문화대학교	사립	본교	충남	2,697	2,622	2,567	2,367	330
백제예술대학교	사립	본교	전북	920	900	840	820	100
부산경상대학교	사립	본교	부산	1,610	1,583	1,506	1,437	173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사립	본교	부산	2,310	2,192	2,114	2,003	307
부산여자대학교	사립	본교	부산	1,578	1,450	1,276	1,216	362
부산예술대학교	사립	본교	부산	475	475	475	465	10
부천대학교	사립	본교	경기	2,696	2,656	2,536	2,381	315
삼육보건대학교	사립	본교	서울	480	480	420	406	74
상지영서대학교	사립	본교	강원	1,291	1,291	1,291	1,291	0
서라벌대학교	사립	본교	경북	510	470	390	343	167
서영대학교	사립	본교	광주	1,987	1,949	1,867	1,828	159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사립	본교	서울	240	180	180	180	60
서울예술대학교	사립	본교	경기	678	678	670	644	34
서일대학교	사립	본교	서울	2,626	2,626	2,606	2,606	20
서정대학교	사립	본교	경기	1,647	1,647	1,647	1,606	41

서해대학	사립	본교	전북	850	850	800	765	85
선린대학교	사립	본교	경북	1,025	985	921	865	160
성덕대학교	사립	본교	경북	625	625	625	625	0
세경대학교	사립	본교	강원	520	510	500	500	20
송곡대학교	사립	본교	강원	330	330	460	264	66
송호대학교	사립	본교	강원	470	440	440	378	92
수성대학교	사립	본교	대구	1,694	1,664	1,644	1,614	80
수원과학대학교	사립	본교	경기	2,821	2,821	2,821	2,780	41
수원여자대학교	사립	본교	경기	1,825	1,825	1,735	1,735	90
순천제일대학교	사립	본교	전남	1,241	1,241	1,241	1,216	25
숭의여자대학교	사립	본교	서울	1,690	1,690	1,650	1,624	66
신구대학교	사립	본교	경기	2,608	2,408	2,373	2,353	255
신성대학교	사립	본교	충남	1,645	1,645	1,590	1,557	88
신안산대학교	사립	본교	경기	2,040	2,040	1,975	1,920	120
아주자동차대학	사립	본교	충남	520	520	520	500	20
안동과학대학교	사립	본교	경북	1,175	1,175	1,105	1,045	130
안산대학교	사립	본교	경기	1,764	1,661	1,625	1,574	190
여주대학교	사립	본교	경기	2,658	2,580	2,506	2,436	222
연성대학교	사립	본교	경기	2,548	2,494	2,371	2,371	177
연암공과대학교	사립	본교	경남	600	565	565	520	80
연암대학교	사립	본교	경북	520	520	520	493	27
영남외국어대학교	사립	본교	대구	480	480	480	480	0
영남이공대학교	사립	본교	대구	2,429	2,379	2,344	2,380	49
영진전문대학	사립	본교	경기	2,812	2,772	2,742	2,674	138
오산대학교	사립	본교	경기	2,370	2,370	2,290	2,290	80
용인송담대학교	사립	본교	대전	1,964	1,944	1,879	1,808	156
우송정보대학	사립	본교	울산	2,480	2,480	2,420	2,420	60
울산과학대학교	사립	본교	경기	1,870	1,837	1,797	1,746	124
응지세무대학교	사립	본교	전북	666	666	666	666	0
원광보건대학교	사립	본교	경기	1,632	1,632	1,602	1,550	82
유한대학교	사립	본교	서울	2,600	2,490	2,300	2,200	400
인덕대학교	사립	본교	인천	2,401	2,401	2,401	2,401	0
인천재능대학교	사립	본교	인천	1,769	1,729	1,679	1,604	165
인하공업전문대학	사립	본교	경기	2,904	2,904	2,904	2,761	143
장안대학교	사립	본교	전남	2,886	2,776	2,716	2,716	170
전남과학대학교	사립	본교	전남	1,461	1,421	1,371	1,331	130
전남도립대학교	공립	본교	전북	860	765	740	725	135
전북과학대학교	사립	본교	전북	780	760	725	687	93
전주기전대학	사립	본교	전북	941	921	895	864	77

전주비전대학교	사립	본교	제주	1,279	1,259	1,246	1,180	99
제주관광대학교	사립	본교	제주	1,194	1,154	1,096	1,096	98
제주한라대학교	사립	본교	광주	1,735	1,735	1,696	1,696	39
조선간호대학교	사립	본교	광주	150	150	149	139	11
조선이공대학교	사립	본교	경남	1,640	1,623	1,574	1,509	131
진주보건대학교	사립	본교	경남	1,070	1,070	833	833	237
창원문성대학교	사립	본교	충남	2,287	2,158	1,828	1,782	505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사립	본교	경기	1,285	1,285	1,285	1,222	63
청암대학교	사립	본교	전남	1,155	1,155	1,101	1,071	84
춘해보건대학교	사립	본교	울산	769	759	724	686	83
충남도립대학교	공립	본교	충남	560	560	543	543	17
충북도립대학	공립	본교	충북	520	520	500	500	20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사립	본교	충북	1,355	1,218	1,195	1,132	223
충청대학교	사립	본교	충북	2,302	2,255	1,797	1,797	505
포항대학교	사립	본교	경북	1,440	1,240	950	900	540
한국골프대학	사립	본교	강원	180	180	180	180	0
한국관광대학교	사립	본교	경기	1,000	1,000	1,000	951	49
한국복지대학교	국립	본교	경기	171	171	221	211	-40
한국승강기대학교	사립	본교	경남	320	320	312	304	16
한국영상대학교	사립	본교	세종	1,437	1,431	1,286	1,219	218
한림성심대학교	사립	본교	강원	1,208	1,208	1,193	1,142	66
한양여자대학교	사립	본교	서울	2,610	2,610	2,595	2,595	15
한영대학	사립	본교	전남	680	680	640	640	40
혜전대학교	사립	본교	충남	1,288	1,250	1,250	1,250	38
호산대학교	사립	본교	경북	1,060	960	860	830	230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및 주요 구조개혁 방안(안)

교 육 부
(대학평가과)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및 주요 구조개혁 방안(안)

I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 배경

-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하고 우리나라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학의 교육 질 제고 노력을 평가
- 평가를 통해 대학의 현주소를 진단한 결과,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학사 구조 개편 등 대학의 질적·자발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

※ VIP 지시사항('15.6.15) 대학들이 스스로 구조개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출구를 만들어 줄 것

※ VIP 담화('15.8.6) 대학이 사회의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사회수요를 반영한 학과와 교육과정 확산 지원 및 강력한 구조개혁 추진

□ 추진 경과

-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수립·발표('14.1.)
- 대학구조개혁 평가기본계획 수립('14.12.)
- 대학구조개혁 평가기본계획 수정('15.2)
- 일반대 1단계('15.4~5월), 전문대 평가 실시('15.5~6월)
- 일반대 2단계 평가 대상 안내 및 1단계 평가 이의신청 접수(6.5~6.12)
- 일반대 2단계 평가 실시('15.7.3~9)
- 평가결과(가안) 안내 및 이의신청 사항 접수('15.8.25~28)

- 대학별 이의신청 사항 전문가 검토 등 이의신청 처리(~'15.8.31)
- 대학구조개혁조치방안 확정 및 이의신청 사항 심의('15.8.31)

II 평가 실시

1. 평가 대상

- 원칙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른 일반대(190교), 산업대(2교), 전문대(137교)
- 예외 : 「대학구조개혁 평가대상 확정(안)」('15.2)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학(종교계, 예체능, 편제완성 후 2년 미도래, 기타)
- 평가대상 확정 : 4년제 163개교, 전문대 135개교

< 평가대상 개요 >

구분	일반대	산업대	전문대	계
총 학교 수	190	2	137	329
평가대상 학교 수	161	2	135	298

2. 평가 개요

□ 일반대 평가

- (1단계 평가) 전체 대학에 대해 교육여건, 학사관리, 학생지원, 교육성과 등 교육의 기본적인 부분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60점 만점: 정성 19점, 정량 41점)

- (2단계 평가) 1단계 평가 대학 중 하위 20% 내외 대학에 대해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특성화계획, 교육과정 운영 등 대학의 특성이 반영된 운영 노력을 평가(정성 40점)

- 1, 2단계 평가 점수를 합산(100점 만점)하여 최종 점수를 산출

□ 전문대 평가

- 직업기초 교양교육과정, 현장 중심 전공교육과정 등 고등직업교육기관 특성에 맞는 지표로 단일평가 실시(100점 만점, 정량 48점, 정성 52점)

Ⅲ 평가 결과에 따른 구분

1. 그룹 및 등급 구분

□ 상하위 그룹 구분

- 총점에 따른 비율(하위 20% 내외)을 기준으로 하되, 대학 간 점수 차를 고려하여 그룹 1, 2 구분

※ 일반대·전문대에 동일한 구분 원칙을 적용하되, 전문대는 일괄 평가인 점을 고려하여 절대 점수(80점 이상/ 미만)도 함께 고려

□ 그룹 내 등급 구분

- (그룹 1 내 구분) 획득 점수를 100점 만점 기준*으로 95점 이상 A 등급, 90점 이상 B 등급, 90점 미만 C 등급으로 구분

* 일반대 그룹 1 대학은 만점이 60점이므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적용

- (그룹 2 내 구분) 점수 기준에 따라 70점 이상 D 등급, 70점 미만 E등급

으로 구분

- D 등급은 점수 기준으로 80점 이상/ 80점 미만으로 구분(전문대의 경우 78점 기준)

< 등급구분 기준 및 학교 수 >

등급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E 등급	별도 조치	평가제외	
				80점이상	80점미만				
학교 수	일반	34교	56교	36교	16교	10교	6교	5교	29교
	전문	14교	26교	58교	13교	14교	7교	3교	2교

IV 구조개혁 조치 방안안

1. 기본 방향

- 당초 발표한 원칙대로 양적 구조개혁으로서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적 정원 감축 실시
- 사회 수요를 반영한 학사구조 개편 등 대학의 질적 변화를 위해
 - 상위 대학의 경우 자율적 구조개혁을 유도해 나감과 동시에
 - 하위 대학에 대해 평가결과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강력한 구조 개혁을 추진
- 구조개혁 메시지를 강력히 전달할 수 있도록 '16년부터 재정지원제한 조치를 적용하되,

- 재정지원제한은 대학의 질적·자발적 변화를 유도하는 매개체로 활용

2. 등급별 정원감축 권고 및 이행

○ 등급별 정원감축 비율

등급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E 등급	평가제외*
감축 비율	일반	자율감축	4%	7%	10%	15%	7%
	전문		3%	5%	7%	10%	5%

○ (정원감축 이행) '13학년도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대학별로 통보된 정원 감축 권고 비율에 따라 대학별 정원감축 계획 수립

- '14학년도 이후 대학이 자율적으로 감축한 실적은 평가에 따른 정원 감축 시 인정되며, 부족분은 '17~'18학년도에 걸쳐 이행

※ 대학 내 정원 조정을 위한 학내 의견 수렴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고, 정원 감축 쏠림 현상 및 일시적인 대입경쟁률 상승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2개 학년도에 분산하여 정원감축 계획 수립

- 대학은 가급적 정원감축 이행 계획을 학사구조 개편 등 질적 변화와 연계하여 수립
- 그룹 1 대학의 경우 신규 또는 기존 재정지원사업, 그룹 2대학의 경우 컨설팅 등을 통해 자율적 이행 유도

3. 사회적 수요에 부합한 학사구조 개편 유도

① 기본 방향

- 그룹 1 대학의 경우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회적 수요에 따른 특성화 추진 등 대학의 자율적 노력을 중심으로 구조개혁 추진

- 그룹 2 대학의 경우 컨설팅 참여를 통해 대학 유형에 적합한 자체 구조개혁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이행실적을 점검

② 대학별 맞춤형 컨설팅 추진 및 관리 방안

- (대상 대학) 총 97개교

- D 등급(53개교), E 등급(13개교)*, 별도 조치(8개교), 평가 제외(23개교)**

** 재학생 정원 전체가 종교 지도자 양성 목적 학과인 경우는 제외

- (컨설팅 단 구성) 정부로부터 독립된 전문가로 구성

※ 컨설팅단 구성 (안)

- 유사 유형별로 컨설팅 단을 구성하되, 구조개혁 평가위원(구조개혁평가와 컨설팅의 연계성 제고), 현 보직 교수(대학의 현실에 맞는 컨설팅 시행), 법·회계 등 전문 영역별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가를 고루 활용
- KEDI : 컨설팅 사업 위탁 관리·운영

- (유형별 관리) D·E 등급, 별도 조치(평가제외 포함) 대학별 유형이 상이하므로, 3개 군으로 분류하고 독립적으로 관리·운영

- (D 등급) 교육여건 등은 어느 정도 양호하나, 학사구조, 교육운영 시스템 등이 다소 미흡한 경우로 미흡한 영역 개선에 주로 초점

- (E 등급) 교육 여건, 교육운영 시스템 등 전반적으로 매우 미흡한 대학으로, 대대적인 개편 및 기능 전환 등이 필요

- (별도조치 등) 특수성이 있는 대학으로, 대학 특성에 맞는 학사구조 개편 또는 대학 운영 시스템 구축 등에 주로 초점

- 각 유형 내에서 대학의 여건 및 특성 등을 분석하여 세부적인 컨설팅 방향을 도출

< 유형별 컨설팅 방안(예시) >

분석 유형		세부내용	컨설팅 주안점
사회 수요에 따른 학사구조 개편 필요	직업교육 위주 나열식 학과	미용, 관광, 조리 및 외식, 보건, 경호 등 사실상 직업교육 위주의 소규모 학과 다수 운영	학과 간 통합 및 융합을 통한 강점 분야 집중 육성
	강점분야 집중 부족	특성화 학과 운영,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 일부 특화된 분야를 가지고 있으나, 그 외 경쟁력이 부족한 학과 운영	강점 분야 위주 육성
교육운영시스템 개선 필요		교육여건, 충원율, 취업률 등이 비교적 양호하며, 나름의 특성화를 추구하고 있으나 교육운영 시스템 상 개선 필요	학사관리, 학생지원 등 교육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안 제시

4. 재정지원 제한을 통한 강도 높은 구조개혁 유도

① 기본 방향

- 그룹 2 대학에 대해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유도하기 위해 '16년부터 재정지원제한 조치를 적용하되,
 - 평가 점수 및 대학 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재정지원제한을 실시하여 대학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동기 부여
- 컨설팅 이행 및 자율적 구조개혁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한 경우 평가를 통해 '17년 재정지원 허용

② '16년 정부재정지원 제한

< E 등급 대학 >

- 재정지원이 기존 체제의 유지 수단이 되지 않도록 완전히 차단

○ 정부재정지원사업 제한

- 신규 사업 및 다년도 사업의 신규 선정 시 재정지원 제한

※ 사업자 공모 시 참여는 허용되나, 사업 선정 시 원칙적으로 재정지원은 불가하며 재정지원제한 기간 동안 자체 재원으로 사업 수행

- 기 선정된 사업 재정지원 제한

○ 신·편입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I·II 유형 제한

○ 일반 및 든든(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100% 제한

< D 등급 대학 >

○ 구조개혁 취지에 따라 재정지원제한을 실시하되, 대학의 자율적 구조 개혁을 유도하기 위해 재정지원의 성격 및 대학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정지원제한 조치를 차등 적용

○ 정부재정지원사업 제한

- 신규 사업 및 다년도 사업의 신규 선정 시 재정지원 제한

※ 사업자 공모 시 참여는 허용되나, 사업 선정 시 원칙적으로 재정지원은 불가하며 재정지원제한 기간 동안 자체 재원으로 사업 수행

※ 예외사항(D, E 등급 공통)

- ▶ 사업의 주 수혜대상이 외부기관이거나 사업비 대부분이 프로그램 운영, 개인 연수 등에 사용될 경우 담당 부처에서 판단하여 제한 완화 가능
- ▶ 대학의 여건·성과와 관계없이 개인에게 지원되는 연구비·장학금 등은 제한대상에서 제외
- ▶ 사회적 수요에 부합하는 학사구조 개편 지원 등 대학구조개혁과 관련된 재정지원사업의 경우, 별도 사업계획에 따름

- 기 선정된 다년도 사업의 경우 재정지원 지속

※ 중간 평가를 통해 중도탈락 결정 시 해당사항 없음

※ 동일 대학이라 하더라도 사업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기 선정된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단의 경우 '16년에 재정지원이 가능하나, 신규로 참여하는 사업단의 경우 참여는 가능하나 해당기간 동안 재정지원은 제한 됨

○ 국가장학금 제한

- 국가장학금 II 유형 참여 시, 신·편입생에 대한 지원 제한

※ 국가장학금 I 유형 100% 지급 가능

○ 학자금대출 제한

- D 등급 중 80점(전문대 78점) 미만 : 신·편입생 일반 학자금 대출 50% 제한

- D 등급 중 80점(전문대 78점) 이상 : 학자금 대출 지원 가능

< '16년 그룹 2 재정지원 제한 범위 >

		정부재정지원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I 유형	II 유형	일반	든든
D 등급	80점 이상	기존 사업 지원 지속 신규 사업 지원 제한	-	신편입생 지원제한	-	-
	80점 미만	기존 사업 지원 지속 신규 사업 지원 제한	-	신편입생 지원제한	신편입생 50%제한	-
E 등급		전면 제한	신편입생 지원제한	신편입생 지원제한	신편입생 100%제한	신편입생 지원제한

③ '17년 정부재정지원 제한

○ D, E 등급 모두 컨설팅 이행 및 자율적 구조개혁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한 경우 평가를 통해 '17년 재정지원 허용

○ D 등급 중 '17년도에도 재정지원제한 대학에 지정되는 경우, 기존 및 신규 정부재정지원사업 제한, 일반, 든든 학자금 50% 제한 적용

□ 최종 지정 결과

		대학 수			재정지원 제한	학자금대출 제한	국가장학금 I 제한
		일반대	전문대	합계			
D 등급	80점 이상*	16개교	13개교	29개교	기존 사업 지원 지속 신규 사업 지원 제한		
	80점 미만	10개교	14개교	24개교	신편입생 국가장학금 II 제한	신편입생 일반 50% 제한	
E 등급		6개교	7개교	13개교	기존 사업 지원 제한 신규 사업 지원 제한 신편입생 국가장학금 II 제한	신편입생 일반·든든 100% 제한	신편입생 국가장학금 I 제한
총계		32개교	34개교	66개교	66개교	37개교	13개교

* 전문대의 경우 78점 이상

□ 결과 공개 방법

① 정부재정지원 가능대학 명단 공개

- 고등교육법상 대학, 전문대학 중 재정지원제한대학(66개교) 및 평가에서 제외된 대학(30개교*)을 제외한 대학 명단(202개교) 공개

* 기타 유형 중 1교(서라벌대, 평생직업교육대학)은 평가에서 제외되더라도 정부재정지원가능 (근거 : 전문대학정책과-1981, '15.4.16)

② 신·편입생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명단 공개

- 신·편입생 일반 학자금 대출 50% 제한 대학(24개교) 명단 공개
- 신·편입생 일반·든든 학자금 대출 100% 제한 대학(13개교) 명단 공개

③ 신·편입생 국가장학금 I 유형 지원가능대학 명단 공개

- 고등교육법상 대학, 전문대학 중 국가장학금 I 유형 제한대학(13개교)을 제외한 대학 명단(316개교) 공개

VIII

향후 추진 일정

- 컨설팅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 9월 셋째 주
- 대학별 구조개혁조치 확정(안) 안내 : 9월 셋째 주
- 컨설팅 방안(가안) 마련 및 대학 관계자 의견 수렴 : 9월 넷째 주
- 컨설팅 방안 확정 및 대학별 컨설팅 착수 : 10월 중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른 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중 정부 재정지원이 가능한 대학

구분	학 교 명
4년제 (131개)	<p>가야대학교, 가천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건국대학교, 건양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성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고신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신대학교, 광운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국민대학교, 군산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남부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전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경주), 동덕여자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양대학교, 동의대학교, 명지대학교, 목원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배재대학교, 백석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상명대학교(천안), 서강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원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결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명대학교, 세종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송실대학교, 신라대학교, 아주대학교, 안동대학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원주), 영남대학교, 영산대학교, 예수대학교, 우석대학교, 우송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위덕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앙대학교, 중원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운대학교, 초당대학교, 총신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라대학교, 한림대학교, 한밭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ERICA), 호남대학교, 협성대학교, 호서대학교, 홍익대학교</p>
전문대 (102개)	<p>가톨릭상지대학교, 강동대학교, 강릉영동대학교, 강원관광대학교, 거제대학교,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남정보대학교, 경북대학교, 경북도립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계원예술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구미대학교, 국제대학교, 군산간호대학교, 군장대학교, 기독교간호대학교, 대구공업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대덕대학교, 대동대학교, 대림대학교, 대원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동강대학교, 동부산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동원대학교,</p>

구분	학 교 명
	<p> 동의과학대학교, 동주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마산대학교, 명지전문대학, 문경대학교, 배화여자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백제예술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부천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서라벌대학교, 서영대학교,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서해대학교, 선린대학교, 수성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송의여자대학교, 신구대학교, 신성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아주자동차대학, 안동과학대학교, 안산대학교, 연성대학교, 연암공업대학, 영남이공대학교, 영진전문대학, 오산대학교, 용인송담대학교, 우송정보대학, 울산과학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유한대학교, 인덕대학교, 인천재능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전남과학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창원문성대학,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충청대학교, 포항대학교, 한국골프대학, 한국승강기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혜전대학교, 호산대학교 </p>

* 대학명은 가나다순임

※ 상기 대학은 재정지원이 전부 가능하며, 그 외 대학에 대한 지원의 종류와 내용은 개별 대학의 안내 참고

구분(제한 범위)		학 교 명
4년제 (16개)	일반 50% (10)	강남대학교, 경주대학교, 극동대학교, 상지대학교, 세한대학교, 수원대학교, 영동대학교, 청주대학교, 호원대학교, 한영신학대학교
	일반 튼튼 100% (6)	대구외국어대학교, 루터대학교, 서남대학교, 서울기독교대학교, 신경대학교, 한중대학교
전문대 (21개)	일반 50% (14)	김포대학교, 농협대학교, 목포과학대학교, 여주대학교, 서일대학교, 성덕대학교, 세경대학교, 송곡대학교, 송호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상지영서대학교, 천안연암대학, 충북도립대학, 한영대학
	일반 튼튼 100% (7)	강원도립대학, 광양보건대학교, 대구미래대학교, 동아인재대학교, 서정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 웅지세무대학교

* 대학명은 가나다순임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른 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중 국가장학금 | 유형 지원이 가능한 대학

구분	학 교 명
4년제 (186개)	가야대학교, 가천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감리교신학대학교, 강남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글로벌), 건양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동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성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경주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세종), 고신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신대학교, 광운대학교, 광주가톨릭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국민대학교, 군산대학교, 그리스도대학교, 극동대학교, 금강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김천대학교, 꽃동네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남부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신대학교, 대전가톨릭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전신학대학교, 대전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경주), 동덕여자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양대학교, 동의대학교, 명지대학교, 목원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배재대학교, 백석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상명대학교(천안), 상지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서원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결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명대학교, 세종대학교, 세한대학교, 송원대학교, 수원가톨릭대학교, 수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송실대학교, 신라대학교, 신한대학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아주대학교, 안동대학교, 안양대학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원주), 영남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영동대학교, 영산대학교, 영산신학대학교, 예수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용인대학교, 우석대학교, 우송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위덕대학교, 을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부대학교, 중앙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 중원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창신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운대학교, 청주대학교, 초당대학교, 총신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침례신학대학교, 칼빈대학교, 평택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구분	학 교 명
	<p>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라대학교, 한려대학교, 한림대학교, 한밭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ERICA), 한영신학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 협성대학교, 호남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호서대학교, 호원대학교,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세종)</p>
<p>전문대 (130개)</p>	<p>가톨릭상지대학교, 강동대학교, 강릉영동대학교, 강원관광대학교, 거제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남정보대학교, 경민대학교, 경북대학교, 경북과학대학교, 경북도립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계원예술대학교, 고구려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구미대학교, 국제대학교, 군산간호대학교, 군장대학교, 기독간호대학교, 김포대학교, 김해대학교, 농협대학교, 대경대학교, 대구공업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대덕대학교, 대동대학교, 대림대학교, 대원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동강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동부산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동원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동서울대학교, 동주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마산대학교, 명지전문대학, 목포과학대학교, 문경대학교, 배화여자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백제예술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부산예술대학교, 부천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상지영서대학교, 서라벌대학교, 서영대학교,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서일대학교, 서해대학, 선린대학교, 성덕대학교, 세경대학교, 송곡대학교, 송호대학교, 수성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승의여자대학교, 신구대학교, 신성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아주자동차대학, 안동과학대학교, 안산대학교, 여주대학교, 연성대학교, 연암공업대학, 영남이공대학교, 영진전문대학, 오산대학교, 용인송담대학교, 우송정보대학, 울산과학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유한대학교, 인덕대학교, 인천재능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장안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전주비전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창원문성대학, 천안연암대학,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청암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충북도립대학,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충청대학교, 포항대학교, 한국골프대학, 한국관광대학교, 한국복지대학교, 한국승강기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한영대학, 혜전대학교, 호산대학교</p>

* 대학명은 가나다순임

□ **일반대학 : 단계평가 적용** (1단계 평가 → 2단계 평가)

○ **(1단계 평가) 전체대학 대상(4개 항목, 총 12개 지표, 총점 60점)**

항목	평가 지표	평가요소	점수	
			정량	정성
교육 여건 (18)	전임교원 확보율	- 전임교원 확보율(국공립/사립/국립대법인 구분 평가, 전임교원의 보수수준 고려(정성)) (최근 3년간 개선 정도 고려, 공사립/국립대법인에만 해당)	8	
	교사 확보율	- 교사 확보율	5	
	교육비 환원율	- 교육비 환원율(국공립/사립/국립대법인 구분 평가) (최근 3년간 개선 정도 고려)	5	
학사 관리 (12)	수업 관리	-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최근 3년간 개선 정도 고려)	5	
		- 강의 규모의 적절성 (최근 3년간 개선 정도 고려)		
	학생 평가	- 시간강사의 보수수준(국립/공사립/국립대법인 구분 평가) (최근 3년간 개선 정도 고려, 공사립/국립대법인에만 해당)		3
	학생 평가	- 수업관리의 엄정성		4
학생 지원 (15)	학생 학습역량 지원	- 학생 학습역량 지원 프로그램 구축·운영 여부	5	
		- 관련 규정, 자원 확보 등 지원		
	진로 및 심리 상담 지원	- 학생 학습역량 프로그램의 정량적, 정성적 실적	3	
		- 환류시스템을 통한 프로그램 개선 실적		
장학금 지원	- 진로 및 심리 상담 지원 프로그램 구축·운영 여부		3	
	장학금 지원	- 관련 규정, 자원 확보 등 지원		5
	취·창업	- 장학금 지급률(최근 3년간 개선 정도 고려)		2
	취·창업	-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 구축·운영 여부		2

항목	평가 지표	평가요소	점수	
			정량	정성
	지원	- 관련 규정, 자원 확보 등 지원 -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정량적, 정성적 실적 - 환류시스템을 통한 프로그램 개선 실적		
교육 성과 (15)	학생 충원율	- 신입생 충원율(수도권/비수도권 구분 평가) (최근 3년간 개선 정도 고려)	3	
		- 재학생 충원율(수도권/비수도권 구분 평가) (최근 3년간 개선 정도 고려)	5	
	졸업생 취업률	- 졸업생 취업률(계열별·성비 고려/권역별 구분 평가) (최근 2년간 개선 정도 고려)	5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	-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 시스템 운영 - 만족도 조사의 체계성 -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의 합리성, 결과에 따른 교육 서비스 개선 노력의 구체성		2
합계			41	19

○ (2단계 평가) 그룹2 대상(3개 항목, 총 6개 지표, 총점 40점)

항목	평가 지표	점수	
		정량	정성
중장기발전 계획 (10)	중장기 발전계획의 적절성		5
	중장기 발전계획과 학부(과) 및 정원 조정의 연계성		5
교육과정 (20)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양 교육과정		5
	전공능력 배양을 위한 전공 교육과정		5
	교육과정 및 강의 개선		10
특성화 (10)	특성화 계획의 수립, 추진, 성과		10
합계			40

□ 전문대학 (6개 항목, 16개 지표, 총점 100점)

항목	평가 지표	평가 요소	점수	
			정량	정성
교육 여건 (20)	전임교원 확보율	- 전임교원 확보율(국공립/사립 구분 평가, 전임교원의 보수 수준 고려(정성)) (최근 3년간 개선 정도 고려, 사립에만 해당)	8	
	교사 확보율	- 교사 확보율	6	
	교육비 환원율	- 교육비 환원율(국공립/사립 구분 평가) (최근 3년간 개선 정도 고려)	6	
학사 관리 (13)	수업 관리	-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최근 3년간 개선 정도 고려)	5	
		- 강의 규모의 적절성(최근 3년간 개선 정도 고려)		
		- 시간강사의 보수수준(국립/공사립 구분 평가) (최근 3년간 개선 정도 고려, 공·사립에만 해당)		
		- 수업관리의 엄정성		3
	학생 평가	- 엄정한 성적 부여를 위한 제도 운영		5
교육 과정 (20)	직업기초 교양 교육과정	- 직업기초능력 중심의 교양 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5
		- 교양 교육과정 혁신을 위한 제도적 노력		
		- 교양 교육과정 질 관리를 위한 평가시스템 구축 및 체계적 운영		
	현장 중심의 전공 교육과정	- 산업현장 직무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10
	- 전공 교육과정 혁신을 위한 제도적 노력			
	- 전공 교육과정 질 관리를 위한 평가시스템 구축 및 체계적 운영			
	현장실습 교육	- 현장실습 교육 운영의 적절성		5
	- 현장실습 교육 혁신을 위한 제도적 노력			
	- 현장실습 질 관리를 위한 평가시스템 구축 및 체계적 운영			

항목	평가 지표	평가 요소	점수	
			정량	정성
학생 지원 (22)	학생 학습역량 지원	-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구축·운영 - 관련 규정, 자원 확보 등 지원 -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정량적, 정성적 실적 - 환류시스템(성과분석 등)을 통한 프로그램 개선 실적		5
	진로 및 심리 상담 지원	- 진로 및 심리 상담 프로그램 구축·운영 - 관련 규정, 자원 확보 등 지원 - 진로 및 심리 상담 프로그램의 정량적, 정성적 실적 - 환류시스템(성과분석 등)을 통한 프로그램 개선 실적		5
	장학금 지원	- 장학금 지급률(최근 3년간 개선 정도 고려)	5	
	취·창업 지원	-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구축·운영 - 관련 규정, 자원 확보 등 지원 -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정량적, 정성적 실적 - 환류시스템(성과분석 등)을 통한 프로그램 개선 실적		7
교육 성과 (20)	학생 충원율	- 신입생 충원율(수도권/비수도권 구분 평가) (최근 3년간 개선 정도 고려)	3	
		- 재학생 충원율(수도권/비수도권 구분 평가) (최근 3년간 개선 정도 고려)	5	
	졸업생 취업률	- 졸업생 취업률(계열별·성비 고려/권역별 구분 평가) (최근 2년간 개선 정도 고려)	10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	-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 시스템 운영 - 만족도 조사의 체계성 -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의 합리성, 결과에 따른 교육 서비스 개선 노력의 구체성		2
특 성 화 (5)	특성화 계획의 수립, 추진, 성과	- 특성화 계획 수립 : 여건분석 및 특성화 선정 분야 간 정합성, 계획의 구체성·타당성·실현가능성 - 특성화 계획 추진 : 자원 확보·활용 등 추진 실적, 주기적 점검·환류 - 특성화 추진 성과 : 성과의 탁월성, 성과의 지속적 유지·발전 방안		5
			48	52

2016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①

교육부 1주기 대학정원감축정책 평가와 진단

- 펴낸이 : 국회의원 유은혜
 - 함께만든이 :
 - 펴낸날 : 2016.9.
-

